

**국제청년포럼 IFWY 가 제안하는
글로벌 변혁 권고안
(IFWY 2025 은평선언문)**



2025.11

작 성 자 : 전 세계 6개 대륙 청년대표
장 소 : 대한민국 서울
행 사 : IFWY 파이널 컨퍼런스

목 차

서 문	2
우리의 공유된 임무와 비전	3
주요 발견	3
주요 정책 권고사항	4
우리의 통합된 요구	5
제1조: 지역 간 통찰	6
주요 연결점	6
통합된 발견 사항	7
제2조: 주제별 권고안	8
2.1 환경 지속 가능성	8
2.2 경제 전환	15
2.3 사회 정의와 평등	27
2.4 기술 혁신과 윤리	31
2.5 평화와 협력	33
2.6 집단 행동과 연대	41
제3조: 행동 촉구	50
3.1 환경 지속 가능성	50
3.2 경제 전환	55
3.3 사회 정의와 평등	58
3.4 기술 혁신과 윤리	64
3.5 평화와 협력	70
3.6 집단 행동과 연대	73

서 문 (Preamble)

모든 변화는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국제청년포럼(IFWY)은 디지털 기반의 과감한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121개국 이상, 27,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역과 대륙을 넘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공유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글로벌 참여는 2025년 10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최종 행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투표하며 공정한 동료 검토 과정을 통해 서로를 강화했습니다. 국경과 차이를 넘어 목소리를 드높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비자 문제로 서울에 오지 못했는데, 이는 오늘날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였습니다.

서울에 모인 IFWY 청년 리더들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 평화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며, 깊은 변혁을 요구하는 전 세계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우리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경쟁과 분열이 아닌 정의롭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함께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했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현재 세계는 환경 지속가능성, 경제 전환, 사회 정의와 평등, 기술 혁신과 윤리, 평화와 협력, 연대와 집단행동 등 복합적이고 연결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시스템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붕괴, 계속되는 분쟁, 기후 위기,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AI 영향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는 교육, 혁신, 협력의 거대한 기회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핵심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 청년 참여 제도화, 포용적 교육 개혁, 성평등 촉진, 윤리적 기술 거버넌스 확립, 청년이 주도하는 평화·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확대

이 정책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변혁을 위한 통합 의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미션과 비전

미션 (MISSION)

우리는 지역·문화·전문성을 초월한 청년 리더들이 지속 가능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 평화·번영·지구의 웰빙을 증진하도록 힘을 모읍니다. 세대 간 대화와 혁신, 실천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며, 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세계를 청년이 직접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전 (VISION)

우리는 모든 인간의 다양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세계를 꿈꿉니다. 청년이 하나 되어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음식·물·주거·안전·의료·기술 접근성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며,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는 미래를 그립니다.

주요 발견 (Key Findings)

2025년 현재,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식량, 물, 주거, 안전, 건강, 기술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논의 끝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주요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후 재난과 환경 불평등

지구는 지속적인 환경 붕괴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와 공동체 전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의 부담은 정부와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불안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 접근 차단

부(Wealth)·성별·지역·인종·기술격차는 교육, 노동, 정치 참여, 소속감 등 핵심 기회에서 수백만 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실제 삶의 괴리

전 세계 교육 체계는 경쟁 중심적이며 현실 문제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회·정서적 학습, 평화 구축, 문화적 이해, 비판적 사고, 금융·기후 문해력, 디지털 시민성 등 필수 요소가 부족합니다.

양극화와 허위정보로 인한 신뢰 붕괴

정치적 양극화, 허위정보, 편향된 미디어는 공동체 간, 세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리와 공정성이 결여된 기술 발전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술 접근성·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AI 편향, 데이터 남용 등이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 참여 구조의 부재

청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공정한 중재와 포용적 거버넌스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식별된 과제들은 불확실성 증가, 광범위한 정신적 피로(mental exhaustion), 그리고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들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고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권고 사항들을 요약합니다.

주요 정책 권고사항

교육을 평화 및 역량 인프라로 재구축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을 초등부터 고등 수준까지 공감, 디지털 윤리, 비판적 사고, 지역 사회 리더십을 가르치는 시민 생태계로 재건하고, 지역 지혜와 미래 지향적 기술을 융합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청년 역량 제도화

다자간, 지역 및 국가 거버넌스 내에 영구적인 청년 대표 의석과 공동 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참여 예산제, 청년 이사회, 디지털 모니터링 도구 등을 통해 책임성을 내재화합니다.

윤리적 기술, 정보 무결성 및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글로벌 협약 체결

기술이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을 강화하도록 보장하는 글로벌 행동을 통합합니다. 여기에는 AI 윤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국제 표준과 분쟁이나 감시에 AI를 군사화하거나 조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포함됩니다. 보편적인 디지털 시민 교육 과정 및 미디어 무결성 시스템과 결합하여, 이 협약은 사회를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디지털 폭력, 인지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교육과 실천을 통한 '글로벌 녹색 연대 협약' 구축

모든 지역을 청년 주도 프레임워크 아래 통합하여, 지속 가능성을 정책뿐만 아니라 일상 행동에 내재화합니다. 순환 경제 습관, 재생 농업, 저(低)영향 라이프스타일을 교육 과정, 디자인, 지역 사회 관행에 통합함으로써 '녹색 생활'이 기본 시민 역량이 되도록 합니다.

보편적 청년 경제 포용 기금 조성

공공 및 민간 자본을 청년 주도 이니셔티브로 유입시키는 다자간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합

니다. 이는 협동조합을 넘어 사회적 기업, 재생 비즈니스, 윤리적 기술 벤처, 그리고 존엄한 노동과 공유된 번영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까지 포함합니다.

글로벌 정신 건강 및 사회적 회복력을 핵심 개발 우선순위로 추진

심리적 웰빙, 소속감, 문화적 활력을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인식합니다. 공감, 연결, 집단 돌봄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생활, 교육, 문화를 재 구상하는 범 분야 협력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사회 전반의 신뢰, 희망, 의미를 강화하는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글로벌 평화 및 대화 인프라 활성화

시민 교육, 기술 협력, 그리고 문화 간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양극화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는 청년 주도 조정 센터 및 지역 간 대화 연구소를 만듭니다.

글로벌 책임 및 투명성 지수 채택

개방형 데이터 대시보드, 분산형 검증, 시민 감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포용성, 환경 정의, 청년 참여를 기준으로 정부, 기업, 다자간 조직을 매년 측정합니다.

공유 학습 및 혁신을 위한 글로벌 샌드박스 제도화

청년, 기업, 정부, 학계, 시민 사회가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변혁의 새로운 모델을 공동으로 탐색하고, 시제품화하며, 개선할 수 있는 개방형의 범 지역적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 샌드박스는 분야와 국경을 초월한 안전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며,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향한 집단 지성, 상호 학습,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합니다.

우리의 단합된 요구

사람(People), 지구(Planet), 목적(Purpose).

제 1 조 : 지역 간 통찰

오늘날 혁신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으며, 기회 또한 그래야 합니다. 국가 간 협력은 기술, 창의성, 정책 통찰을 공유하고 문화·사회적 차이에 적응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디지털 협력, 국경 간 정책 교류, 그린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인구 구조에 대응한 경제 재건 등은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혁신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스타트업 교류, 혁신 허브, 공동 연구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적 협력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경 간 협력은 단순한 경제 전략을 넘어 “공동의 발전”을 향한 약속입니다.

주요 연결점 (Key Connections)

청년들이 발견한 여섯 지역 간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성과 신뢰

유럽과 북미는 디지털 신뢰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은 참여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합니다. 모든 지역의 청년들은 책임성과 기술, 시민 참여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교육과 포용성

지역별 우선순위는 달라도 교육은 진보의 핵심입니다. 유럽의 포용 교육 모델은 라틴아메리카의 시민교육 모델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북미와 아시아·태평양의 혁신 중심 교육은 새로운 참여 방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AI 및 기술 발전

기술은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청년들은 책임성·규제·데이터 협력을 요구하며, 기술과 인권·접근성·투명성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4.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

모든 지역은 환경을 정의와 발전의 핵심으로 봅니다. 아프리카·중동·라틴아메리카는 순환경제와 회복력을, 유럽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북미는 원주민 생태 지식을, 아시아·태평양은 기후 적응 혁신을 강조합니다.

5. 글로벌 협력

협동조합 모델은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포용적 경제 대안으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통합된 발견사항 (Integrated Findings)

모든 지역에서 다음 다섯 가지 방향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 책임성과 윤리적 거버넌스
2. 교육과 포용성
3. 지속가능성과 환경 정의
4. AI 및 기술 발전과 접근성
5. 글로벌 협력과 상호 학습

청년들은 기술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정부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 기후 정책, 기술 규제는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 차이는 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제 2 조 : 주제별 권고안

2.1 환경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핵심 미션과 가치 (Core Mission and Values)

우리는 지구의 시민으로서 이제부터 내리는 모든 결정이 행동 중심적이며 기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교육,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의 자본 중심 사고, 독점적 구조, 무지, 무기력의 가치를 버리고 집단행동, 협력적 사고, 인식, 희망의 가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환경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탄소 배출 감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짓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혁신과 전통 지식의 조화, 생물다양성 보호, 순환경제, 지역 공동체의 포용적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문제 (Primary Challenges)

1.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

○ 기후변화와 비지속적 개발로 인해 생태계는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불, 산호 백화, 습지 파괴 등은 자연 서식지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UNEP에 따르면 산불 위험은 2025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 회복력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 기여도는 낮으나 피해는 큰 지역(저탄소배출국)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건설 산업의 탄소 발자국 및 폐기물 문제

○ 전 세계는 심각한 폐기물 및 건설 관련 탄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분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이 중 20%도 채 되지 않는 양만이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만 해도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며, 이는 주로 시멘트와 철강의 과도한 사용과 비효율적인 철거 관행 때문입니다.

○ 현재의 선형적인 '취득-제작-폐기' 모델을 지속하는 것은 삼림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합니다.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는 단순한 환경적 필요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후 회복력의 기반이 됩니다.

3. 정책·교육·계획 구조의 부재

○ 지속 가능한 전환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는 교육, 정책, 지역 실행을 연결하는 강력하고 일관된 체계의 부재입니다. 어린 시절 환경 교육의 부족은 어린 나이부터 생태적 인식과 책임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며, 기존 기후 및 환경 법규의 약한 집행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관행이 통제되지 않은 채 지속됩니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주도 및 풀뿌리 이니셔티브에 대한 제한적인 자금 지원은 혁신과 지역 해결책의 확대를 제한하여 잠재적인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은 기후 위기의 체계적 특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계획과 단기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 똑같이 우려되는 점은 청년, 원주민, 지역 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및 환경 정책이 그들의 참여 없이 수립될 경우, 사회적 형평성, 문화적 맥락,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포용적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교육, 역량 강화,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행위자들을 권한 부여하면, 지역 사회가 상향식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적극적인 리더로 변모하게 됩니다.

4. 산업화된 농업·식량 시스템의 문제

○ 산업화된 농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적·사회적 문제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단일 작물 재배, 화학 비료 사용, 대규모 기계화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토양 생물 다양성 감소, 영양소 손실, 침식, 심지어 사막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태적 균형보다 단기적인 생산성과 수익을 우선시하며, 장기적인 식량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 단일 작물은 해충, 가뭄, 변화하는 기후 패턴에 덜 견디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농지를 기업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소규모 농민과 원주민 공동체가 쫓겨나 전통 지식과 지역 식문화에 연결된 문화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환경 파괴를 넘어, 산업 식품 시스템은 식량 안보와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수입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지역 자급 능력이 감소하고 시장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비전과 해결책 (Vision and Solutions)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미래, 즉 혁신, 교육, 그리고 정책이 지구와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구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현실의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생태계 복원 및 보호 (Ecosystem Restoration and Protection)

원주민 지식과 현대 생태학적 과학을 결합한 지역사회 주도 보존 및 재조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청년 및 지역 협동조합이 지원하는 생물 다양성 회랑, 해안 보호 구역, 그리고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합니다. 고위험 및 자원 고갈 지역의 복원을 위한 국제적 자금 지원을 동원합니다.

○ 순환 경제 및 폐기물 관리 (Circular Economy and Waste Management)

폐기물 발생 및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혁신과 녹색 고용을 촉진하는 청년 주도의 재활용, 업사이클링,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매립 의존도를 줄이고 재료 재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순환 혁신 허브를 개발합니다. 기존 구조물 개조, 저렴한 친환경 주택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협동조합 파트너십을 장려합니다.

○ **교육, 인식, 포용적 참여 (Education, Awareness, and Inclusive Participation)**

환경 리터러시, 순환 경제 원칙, 그리고 기후 인식을 모든 교육 수준에 통합합니다. 계절성을 강조하여 지역 농산물 및 작물을 조달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청년을 교육합니다. 취약 공동체를 고려하여 청정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정책 권고 사항 (Policy Recommendations)

1. 국가 기후 비상 기금 (State Emergency Climate Fund)

○ **누가(WHO)** : 기후 연대 프레임워크(Climate Solidarity Framework, CSF)의 설립 및 관리는 관련 UN 기관의 조정 하에 국제 연합국이 주도하며, 국가 정부, 인도주의 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 기반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부유하고 잘 보호되는 국가들이 주요 기여 및 지원국 역할을 하며, 취약 국가들(특히, 소규모 섬 및 저 지대 국가들)이 주요 수혜국이 됩니다.

○ **언제까지(WHEN)** : CSF는 기후 관련 재난 직후 또는 대피, 이주, 또는 재건을 필요로 하는 예상된 고위험 사건 발생 시 즉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이행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통합된 지속적인 협력 및 사전 합의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상 상황 대비와 지속적인 회복력 구축을 모두 보장합니다.

○ **성공 판단 기준(HOW)** :

지원은 기후 보호 지위(Climate Protection Status)를 통해 제공되며, 인도주의적 기후 비자, 지역사회 후원 프로그램, 그리고 조정된 대피 통로를 제공합니다. 자금 조달은 기존 손실 및 피해 기금과 연계된 글로벌 회복력 및 이동형 기금(Global Resilience and Mobility Facility)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상 및 재건 단계를 위한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여는 소득과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부담 분담에 따르며, 복구 노력은 지역 리더십, 노동 참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강조하는 “더 나은 재건(build-back-better)” 원칙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연대를 실행 가능하게 하며 위기 대응을 장기적인 회복력과 정의로 전환합니다.

2. 교육 (Education)

○ **누가(WHO)** : 국가 부처(특히, 환경부와 교육부)와 함께 지방 정부, 학교, 대학, 그리고 민간 부문 파트너가 지속 가능성 교육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이행합니다. 시민 사회 조직, 농업 협동조합,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은 홍보활동 및 참여에서 핵심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언제까지(WHEN)** : 이러한 계획은 국가 기후 교육 전략의 일부로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단기 워크숍 및 이벤트는 매년 실시되고, 교육 과정 개혁은 다음 교육 주기 내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은 전 부문에 걸쳐 지속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 **성공 판단 기준(HOW) :**

환경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 및 체험 학습 이벤트를 조직하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의 녹색 및 블루 일자리 기회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환경 애호가 및 전문가를 위한 교육 이벤트, 훈련 세션, 그리고 온라인 강좌의 확대를 지원하여 전문 지식을 심화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친환경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농민 및 농촌 근로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워크숍을 설립합니다. 교육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수 고등학교 과목을 도입하며 모든 수준에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교육을 통합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녹색 인증 일자리 및 지속 가능한 재료의 최소 할당량을 요구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창출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은 전국적으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3. 청정하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 (Clean and Just Energy Transition)

○ **목 표 :** 목표는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재생 가능 에너지 확장 및 공정 전환 프로그램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종종 생산적 투자보다는 글로벌 시장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 에너지 회복력, 가계 비용 절감, 그리드 현대화, 그리고 직업 훈련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과 화석 연료 의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여, 전환이 경제 안보와 지역 고용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도록 보장합니다.

○ **누가(WHO) :** 재정부가 에너지/환경부, 국가 에너지 규제 기관, 그리고 독립적인 공정 전환 자문 위원회와 협력하여 주도합니다. 시민 사회 조직, 노동 조합, 그리고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계획 및 감독에 참여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WHEN) :** 재정 설계 및 공공 협의를 즉시 시작합니다. 매년 검토 및 조정 메커니즘을 갖추고 2026년 9월까지 화석 연료 초과 이익세를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 **성공 판단 기준(HOW)**

1단계 (1년차) : 수익 모델링을 수행하고, 세금 매개변수를 확정하며, 독립적인 감독 및 감사 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익을 받을 에너지 전환 기금(Energy Transition Fund)을 설계합니다.

2단계 (2-3년차) :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에서 수익의 50% 이상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화석 연료 초과이익세(FFWT)를 시행합니다. 초과이익은 현재 연도의 세전 이익이 (a)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평균 또는 (b) 8% 정상 자본수익률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됩니다.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10억 유로/달러까지는 30%, 그 이상은 45% 세율을 적용하며, 세계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을 경우 가격 상한을 +5% 적용합니다. 그룹 통합 신고, 회피 방지 규정, 헤지 회계 요건, 독립 감사 등을 통해 제도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3단계 (4-5년차) : 수익을 다음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 2040년까지 70% 재생 에너지 전력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
- 저소득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가정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
- 근로자와 영향을 받는 지역 경제에 대한 보장 지원과 함께하는 직무 재교육 및 공정 전환 일자리 배치

4. 식량 시스템 (Food Systems)

- **목 표 :** 주요 목표는 토지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 및 원주민 공동체가 생태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그들의 영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에는 생물 다양성과 농민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지역사회 종자 도서관의 생성 및 지원, 성공적인 지역 이니셔티브의 매핑 및 복제, 그리고 원주민 및 조상의 지식에 뿌리를 둔 전통 식단 및 식량 주권의 장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건강, 문화적 활성화, 그리고 생태학적 균형을 육성합니다.
- **누가(WHO) :** 지방 당국, 대학, 그리고 시민 사회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정부가 주도합니다. 농민 협동조합, 여성 단체,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가 중심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 **언제(WHEN) :** 토지 집중도를 매핑하고 기존 지역 종자 및 식량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기 위한 1년간의 준비 단계를 통해 즉시 시작합니다.
- **성공 판단 기준(HOW) :**
 - 1단계 : 국가 매핑 및 다분야 자문 위원회 구성.
 - 2단계 : 종자 도서관, 식량 허브, 그리고 농업 생태학 훈련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 3단계 : 국가적 확장 및 교육, 건강, 그리고 농촌 정책으로의 통합.

추가 조치에는 토지 할당 및 공정한 재분배, 소규모 생산자 및 토지 관리인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이로쿼이 백옥수수 프로젝트(Iroquois White Corn Project)와 같은 계획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식단 및 재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 및 지역 식량 경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행함으로써, 국가들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고, 문화적 및 생물학적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며, 토지와 식량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순환 경제 (녹색 도시 계획) (Circular Economy (Green Urban Planning))

- **목 표 :** 순환 건설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9년까지 생산자 책임 확장(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법규를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업에게 제품의 설계 및 생산부터 폐기 및 재활용까지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 EPR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농업 부산물로 만든 생분해성 포장재 또는 해체된 건물 및 기계의 용도 변경과 같은 친환경 혁신을 장려하고, 매립지 투입물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 **누가(WHO)** : 정부 및 지방 당국은 순환 건설 규정을 집행하고, 재사용 또는 저탄소 재료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계획 단계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요구합니다. 민간 부문 및 건설 회사는 EPR 준수 및 순환 혁신을 위한 공동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통합합니다. 교육 기관은 지속 가능한 설계, 재료 재사용, 그리고 녹색 유지보수 분야에서 청년 및 지역 주민을 훈련시키는 직업 및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공동체 및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재료 사용을 추적하며, 순환 도시 개발을 위한 투명한 책임 기관 역할을 합니다.

○ **언제까지(WHEN)** :

2026년까지 : EPR 및 지역 재료 재사용 정책을 통합한 지역사회 주도 협동 주택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28년까지 : 순환 건설 관행 추적 및 공유를 위한 지역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2029년까지 : 적어도 50% 이상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 도시 지역에서 지역 협력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EPR 법률의 전 세계적 시행을 달성합니다.

○ **성공 판단 기준(HOW)** :

주민들이 재료 재사용, 폐기물 감소, 그리고 녹지 공간 유지보수를 모니터링하는 지역 지속 가능성 위원회를 공동 관리하는 도시 주택 및 건설 프로젝트 내에 지역사회 주도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합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여 친환경 건설 및 재료의 순환 재사용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공동 설계 플랫폼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구축합니다. 이는 소도시 공무원, 주민, 계획가, 지역 기업, 그리고 해체/건설 그룹에게 재료를 효과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술 프로그램은 해체 모범 사례, 건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방법, 재료를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하게 재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주민들이 이웃 폐기물 관리, 녹색 인프라 유지보수, 그리고 마이크로 포레스트 또는 옥상 정원 조성을 위한 공동 책임을 지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도시 협동 프레임워크를 시행합니다. 도시 확산 및 탄소 의존도를 줄이는 소형, 복합 용도, 그리고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을 강조하는 적응형 도시 설계 정책을 장려합니다. 재료가 가능한 경우 재사용되고,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료의 품질이 높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6. 글로벌 자연 보전 및 생태계 복원 (Global Nature Conservation and Ecosystem Restoration)

이 제안서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황폐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고 조정된 글로벌 행동을 촉구한다. 주요 목표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포용적 과학 기반 지역 협력 중심의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핵심 우선 분야는 산림, 습지, 초원, 산호초, 맹그로브, 해양 생태계 등 탄소 흡수원이며 생물다양성의 핵심 거점이다. 특히 태평양 카리브해-인도양의 섬 생태계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손실에 가장 취약하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누가(WHO)

본 이니셔티브는 UNEP이 주도하고, 지역 환경기구, 각국 환경·기후부처, FAO·UNESCO·UNDP 등 UN 기관 및 국제 연구 네트워크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 청년단체,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언제까지(WHEN)

2026년까지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고 2028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현재 즉시 취약 생태계 파악, 글로벌 자금 조성, UN 생태계 복원 10년(2021-2030)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성공 판단 기준(HOW)

1단계(2025-2026) :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지구 생태계 건강 보고서 발간

2단계(2026-2028) : 국제 복원 프로젝트 시행—재조림, 산호 복원, 맹그로브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등

3단계(2028-2030) : 보호지역(육상·해양) 15% 확대, 연간 복원 성과 지표(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 회복력 등) 발표

이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생태계 복원을 주도하고, 육상·해양 생명을 보호하고, 취약한 섬 생태계를 지키며, 전 지구적 회복력·평화·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2 경제 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

핵심 사명과 가치

경제 전환은 지속가능성, 형평성, 혁신의 교차점에 서 있다. 기술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 확대 속에서 청년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재설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은 기초 소양, 협력적 혁신, 투명한 거버넌스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발전 체계를 디지털 보안, 금융 소양,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이 보장된 시스템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청년 리더십 강화, 제도 신뢰 회복, 모든 경제 시스템의 책임성 내재화를 지향한다.

주요 도전 과제

전례 없는 기술적·재정적 발전의 결과로,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변화를 이루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글로벌 경제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체계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현시대의 환경 위기와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 디지털·금융 불평등

전 세계 25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고, 청년의 1/3 이상이 기본 디지털/금융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

2. 환경·경제 취약성

기후 불안정은 생계·인프라·보건을 위협하며, 개발도상국 청년은 일자리 불안정, 식량 불안, 이주 위험에 더 취약하다.

3. 정부·재정 투명성 부족

UNODC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5%가 부패로 손실된다.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 능력을 약화시킨다.

4. 취업·창업 기회 부족

청년 실업률은 13%로 성인 대비 3배. 멘토링 부재, 스타트업 자금 부족 등이 원인이다.

5. 글로벌 협력 미흡

표준화된 글로벌 프레임워크 부재로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 투명성 등의 협력이 어렵다.

비전과 해법

우리는 디지털 포용적이고,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투명하게 관리되는 경제적 변화를 구상합니다. 성공은 불평등의 측정 가능한 감소, 제도적 신뢰 강화, 금융 및 환경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 증가로 정의될 것입니다.

2035년까지 우리는 다음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 :

- 100% 국가에서 금융·디지털 소양 교육 채택
- 청년·정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지능 위원회(CIC) 설립
- 글로벌 청년 실업률 10% 감소
- 지속가능한 자원 기반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 국제 회계·감사 기구(IAB) 창설 및 투명성 강화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는 국제 개발 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한 통합 전략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교육에서 고용, 협력에서 책임성에 이르기까지 기반을 다지며, 공정하고 정보에 밝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경제의 틀을 구축합니다.

정책 제안

다섯 가지 연계된 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사회·경제적 형평성 향상, 국제 개발 체계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1. 글로벌 금융·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요약

디지털·금융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UN 승인 글로벌 교육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2026년 UN 채택 → 2028년 국가단위 시행 → 2032년 글로벌 평가를 목표로 한다.

문제점

- 교육 표준의 분절
- 사이버 범죄 증가
- 실용 금융 교육의 부재
-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 심화

정책 제안

우리는 유엔이 필수 21세기 역량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통합할 것을 정식으로 권장합니다. 이 조치는 금융 및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든 동의하는 회원국의 전체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의무적이며 학제간 교육 요소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 글로벌 지도 및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 리더십** : 유네스코와 UNDP는 본질적으로 결과 지향적인 표준화 핵심 교육과정의 창설에 대한 관리를 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육과정은 다양한 지역적, 법적, 문화적 상황에 신속하고 원칙적으로 현지화 및 적응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최소 교육 내용 기준** : 보편적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금융 문해력** : 개인 자원 배분(예산 수립), 저축 방식, 투자 기초, 책임 있는 신용 평가, 효과적인 채무 관리,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은퇴 계획.
- **디지털 문해력** :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사용 원칙,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 의식, 디지털 금융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안전하고 정보에 기반한 활용.

B. 글로벌 거버넌스 및 조정

○ **UN 글로벌 운영위원회(GSC)** : 다자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UN 시스템, 세계은행, 교육 당국, 금융 부문, 주요 민간 기술 기업 및 조직화된 시민사회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이 기구는 프레임워크 운영화에 대한 전략적 감독을 제공합니다.

○ **GSC 기능** : GSC는 국제적 자본 유치, 지역화된 교육과정 적응의 공식 인증, 그리고 정의된 핵심 성과 지표(KPI)를 통한 전 세계 진행 상황의 엄격한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 실행 계획 (글로벌 롤아웃 및 모니터링)

실행은 안정성, 강력한 역량 구축 및 측정 가능한 글로벌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

1단계: 기초 구축 및 프레임워크 채택 (2025–2026)

핵심 행동	책임 이해관계자	일정 목표
유엔 프레임워크 결의	유엔 총회(UNGA) 및 유네스코	2026
표준화된 핵심 교육과정 최종 확정	유네스코, 학술 전문가	2026 3분기
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	세계은행, 지역 개발 은행	2026 4분기

2단계: 역량 강화 및 지역 파일럿(2026–2028)

초점은 글로벌 교육자와 국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역 중심 론칭을 준비하는 데 맞춰집니다.

핵심 행동	책임 이해관계자	세부내용
글로벌 교사 연수 계획(GTTI)	UNESCO, 대학교	국가 교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교수법을 강조하는 의무 '트레인 더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도입
디지털 오픈 자료 개발	민간 기술 기업, 기술부서	상호작용 모듈과 시뮬레이션 환경을 호스팅하는 다국어 오픈 소스 플랫폼 만들기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선정된 회원국, 지역 기구	3개 대륙의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5~10개 지역에서 파일럿 배치를 진행하여 중요한 피드백을 수집
금융 부문 통합	국제 금융 기관	정식 금융 서비스 접근과 디지털 거래 관리 능력 향상을 다루는 전문 모듈을 개발

3단계: 보편적 채택 및 글로벌 영향 모니터링 (2028–2032)

핵심 행동	책임 이해관계자	목표 지표 (KPI)
전국적 범위의 보편적 도입	회원국 동의, UNESCO 감독	공공 및 고등 교육 기관 100% 배치를 달성 (목표: 2028)
영향 평가 및 글로벌 벤치마킹	GSC, UN 경제 위원회	핵심성과지표(KPI) 측정: 국가 저축률 증가, 사이버 범죄/사기 사건 감소, 공식 금융 포함 증가 (목표: 2032)
지속적인 교육과정 업데이트	GSC, 민간 기술 기업	기술 및 금융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매년 콘텐츠 개정 수행

2. 정부 협동조합 정보위원회 설립 권고 정책

요약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입니다. 기아, 빈곤, 기회의 부족, 불평등, 그리고 제한된 인프라 접근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들은 세계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을 조화시키는 해결책의 출현을 촉진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혁적 잠재력을 가진 집단적 사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정부가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동조합 기반 해결책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의지, 조직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개인, 청년, 지역사회, 협동조합 및 공공정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공간을 만들어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고 지역적 문제를 식별 및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점

식량 불안정, 에너지 불안정, 빈곤, 실업, 불평등과 같은 주요 글로벌 문제들이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리더로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부 내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조정과 지식의 부족입니다.

예시 : 협동조합 모델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책 제안

우리의 공공 정책 권고안은 각 국가가 정부 협력 정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국가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각 국가에 설립되어야 하며, 어떠한 공공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반드시 국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부, 지역사회, 청년 지도자, 시민사회를 혼합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3. 글로벌 청년 고용 및 멘토십 네트워크(GYEMN)

요약

본 제안서는 교육과 고용 간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는 중앙집중식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인 글로벌 청년 고용 및 멘토십 네트워크(GYEMN)의 설립을 옹호합니다. GYEMN은 젊은 전문가, 산업 리더, 글로벌 조직, 멘토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생태계로 기능하며, 목표 맞춤형 일자리 배치, 전문 역량 강화, 지속적인 경력 발전을 촉진합니다. 전략적 목적은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산업계가 숙련된 취업 준비 인재 풀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까지 UN 기관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2028년까지 네트워크의 완전한 활성화를, 2030년까지 청년 고용률에 대한 초기 영향 평가를 목표로 합니다.

문제 제기

전 세계적으로 학업 준비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경직성이 지속되어 만성적인 청년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일자리의 불일치는 단편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멘토링 부족, 역동적인 산업 요구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구조적 단절은 개인의 잠재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불안정 및 숙련된 인력의 해외 유출(두뇌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경제적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재와 글로벌 기회를 연결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상호 연결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교육 기관에서 인증하는 기술과 민간 부문에서 요구하는 역량 간의 심각한 단절
- 전문가 네트워크, 멘토링 및 고성장 산업에 대한 청년 인재의 제한된 노출
- 최근 졸업생들에게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국내 및 지역 노동 시장
- 국내 청년 개발을 위한 멘토링 자원으로서 해외 거주 동포 및 학문적 전문 지식의 불충분한 활용

정책 권고 (GYEMN 프레임워크 채택)

국제기구(특히 UNDP 및 ILO)가 글로벌 청년 고용 및 멘토링 네트워크(GYEMN)의 공동 후원을 맡아 회원국 간의 청년 노동 시장 통합을 위한 주요 운영 프레임워크로 채택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한다.

A. 글로벌 권한 및 네트워크 구조

- **핵심 기능** : GYEMN은 인재 공급과 산업 수요 간의 높은 충실도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프로파일링, 기회 매칭 및 인증된 멘토링 추적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할 것이다.
- **기술 인증** : 네트워크는 비학문적 역량(예: 소프트 스킬, 프로젝트 관리)을 전통적인 자격과 함께 인증하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 프로필이 글로벌 고용주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 **멘토링 경로** : 경력 지도 및 산업별 지식 이전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거주 동포 단체, 정부 및 노련한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의무적으로 통합한다.

B. 글로벌 거버넌스 및 조정

- **청년 고용 거버넌스 위원회(YEGC)** : 각국 청소년부, 국제노동기구(ILO), 학자, 민간 부문 인사 책임자 및 주요 청년 단체 대표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 **YEGC 기능** : 위원회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참여 지표를 모니터링하며, 윤리적인 데이터 관행을 보장하고,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진화하는 글로벌 노동 동향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C. 이행 계획 (글로벌 출시 및 모니터링)

이행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단기 연간 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2032년까지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마무리되는 등 신속한 개발, 강력한 파트너 동원 및 검증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1단계: 기반 및 프레임워크 승인 (2026년)

주요 활동	책임 이해관계자	목표 시기
공동 후원 결의안	UNDP, ILO,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2026년
YEGC 설립 및 초기 자금 확보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 파트너	2026년 3분기
디지털 플랫폼 청사진 최종 확정	민간 기술 파트너, 청년 단체	2026년 4분기

2단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시범 사업 (2027–2028년)

이 단계는 기술적 출시, 사용자 동원, 그리고 연간 주기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운영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활동	책임 이해관계자	세부 내용
GYEMN 다중 모드 플랫폼 출시	민간 기술, UNDP, 청소년부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의 완전한 활성화 및 졸업생, 고용주, 훈련 기관을 연결하기 위한 상응하는 지역별 오프라인 연계 프로토콜 개발.
글로벌 멘토 모집 캠페인	해외 동포 단체, 학자, NGO	5개 핵심 산업 분야(예: 녹색 기술, 디지털 서비스)에 걸쳐 최소 5,000명의 전문 멘토 확보.
멘토십 및 취업 지원 활동 구축	청소년부, ILO, NGO	대학, 산업 단지, 지방 커리어 센터에서 연간 지역별 채용 박람회, 멘토십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활동 실시.
지역 시범 프로그램	선정된 청소년부, ILO	인구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지역에서 청년의 취업 전환율에 초점을 맞춘 시범 프로그램 시작.

3단계: 확장 및 영향 모니터링 (2029–2032년)

주요 활동	책임 이해관계자	목표 지표(KPI)
국가적 통합 및 확장	동의를 회원국, 청소년부	모든 참여 국가에서 목표 청년 인구의 50%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달성 (목표: 2030년). 가상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포털을 통한 전국적인 일자리 홍보 시행.
종합적인 영향 평가	YEGC, 학자	KPI 측정: 국가 청년 실업률 10% 감소 (목표: 2032년), 네트워크 사용자 취업률 증가.
지속적인 네트워크 조정	YEGC, 민간 기술	새로운 기술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플랫폼의 연간 검토 및 기술 업데이트.

4. 지역 스타트업 금융 지원 및 후원 이니셔티브

개요

지역 스타트업 금융 지원 및 후원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혁신, 녹색 성장, 포용적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에 금융 지원과 역량 강화 지원을 모두 제공하는 포괄적인 지역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가들을 지속 가능한 자금 및 기술 전문 지식과 연결함으로써,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지역 전반에 걸쳐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국경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 개발 은행, 다자간 기구, 외부 기금 모금 파트너십으로부터 재원을 동원

하여 지역 공동의 이익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참여 정부와 기관들은 공동의 접근 방식을 통해 자본 접근성 부족, 취약한 관리 역량, 규제 파편화, 디지털 무역 장벽 등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스타트업들은 보조금, 양허성 대출, 혼합 금융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멘토링, 비즈니스 교육,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특히 청년 및 여성 기업가에 주목하며, 신재생 에너지, 순환 경제, 사회 혁신 분야에서 기술 기반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문제 제기

스타트업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지만, 개발도상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 은행이나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 국경 간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 및 디지털 장벽이 존재한다.
- 불평등한 기회로 인해 청년의 창업 참여율이 낮다.

지역적 협력과 자금 지원 없이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지역 차원의 금융 지원 및 기술 지원 메커니즘은 국제적인 자원과 지식을 결집하여 기업가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초기 및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에 보조금, 양허성 대출, 혼합 금융을 제공한다.
- 기술, 신재생 에너지, 사회 혁신 분야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멘토링, 비즈니스 교육,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 기업가들이 금융 이해력, 사업 계획, 투자 유치 준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A. 주요 파트너

- 국제기구 :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ASEAN(아세안)
- 개발은행 :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 국가 기관 : 산업·재정·디지털경제 관련 부처, 정책은행
- 민간 부문 : 벤처 캐피탈 회사,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 학계 및 혁신 허브 : 대학교, 지역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R&D센터

B. 이행 계획

1단계 (2026–2027년)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자금 조달

- FEALAC, ASEAN, UNIDO와 같은 기구 산하에 재무, 산업, 디지털 경제 부처가 참여하는 지역운영위원회(RSC)를 구성한다.
-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은행, 양자 공여 기관,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모아 스타트업 개발 기금(SDF)을 설립한다.

- 초기 및 성장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 지역별 이행 기관(민관 혁신 허브,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을 지정하고 등록한다.

2단계 (2028–2030년): 프로그램 출시 및 시범 운영

- 녹색 기술, 디지털 혁신, 포용적 비즈니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범 펀딩 라운드를 시작한다.
- 사업 계획, 기술 도입, 재무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술 지원 센터를 설립한다.
- 신청 접수, 멘토십 매칭, 재무 추적을 위한 온라인 '지역 스타트업 포털'을 구축한다.
-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3단계 (2031–2035년): 지역적 확장 및 통합

- 금융 지원 범위를 새로운 분야(AI,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한 농업)로 확대한다.
- 디지털 허브를 통해 연결되는 국경 간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스타트업의 금융 거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통의 디지털 자산 및 세금 프레임워크를 통합한다.
- 민관 파트너십과 녹색 채권을 통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기금을 조성한다.

C. 기대 효과

- 개발도상국 지역 전반의 스타트업 자금 조달 접근성 향상
- 기업가 생태계 및 혁신 역량 강화
- 청년 및 여성의 비즈니스 참여 증대
- 공유된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경제 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속 가능한 외부 투자 유치

5. 경제 및 정책 투명성 지원을 위한 국제 감사 기구 설립 정책

개요

모든 발전 수준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성별에 기반한 임금 격차, 그리고 자수성가한 개인이 직면하는 장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정 관리 부실, 부패, 불투명한 보고 관행은 이러한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정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잠식한다.

본 정책 보고서는 유엔(UN) 산하에 국제 감사 기구(IAB) 설립을 제안한다. IAB는 공공 재정 대시보드 구현을 감독하고, 독립적인 감사 및 재정 컨설팅을 제공하며, 정부의 재정 보고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다른 국제 금융 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재정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며, 시민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IAB의 감사 프레임워크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강화된 컨설팅 서비스와 양허성 자금 지원 패키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참여가 장려될 것이다.

문제 제기

기존 기관들이 내부 평가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IAB는 표준화된 기관 간 감사를 실시하고 통합된 공개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현재의 파편화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동 및 사회 시스템 내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재정 책임성에서도 비롯된다. 많은 정부가 투명한 보고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공공 지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패와 비효율이 만연하여 개발 목표를 저해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듯이 공여국과 수혜국 사이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정부 지출 및 수입원의 투명성 부족
-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으로 인한 부와 성별 격차 심화
- 접근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재정 감독에 대한 시민 참여 제한
- 부패와 재정 관리 부실이 지속되게 하는 취약한 책임성 메커니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 보고 관행을 표준화하며, 대중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A. 국제 감사 기구 설립 방안

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UN) 산하에 국제 감사 기구(IAB)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본 기구는 IMF와 세계은행 등 다른 금융 기구들을 감사해야 하므로 이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정치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과 부패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AB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 재정 지침을 제공하는 컨설팅 파트너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독립성 : IAB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감사관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무 배정 전에 잠재적 이해 상충을 신고해야 한다.
- 거버넌스 : IAB는 재정 전문가, 지역 대표, 시민 사회 참관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시민 참여 : 시민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감사 결과의 검증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권고안이 실제 경험에 기반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B. 재정 대시보드 구축

IAB는 공공 재정 대시보드의 개발을 감독하고 정부 기관에 자문을 제공한다. 이 대시보드는 중앙화된 공개 재정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며, 다음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기본 재무제표
- 예산액, 집행액, 지출 근거 법률/정책, 항목, 날짜가 명시된 상세 지출 내역표
- 지출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 (해당되는 경우, 예: 투자 수익률(ROI), McD 점수 등)
- 비공식 경제 부문의 청년을 포괄하기 위해, 국민 소득 데이터, 간소화된 대리자산조사,

다차원 빈곤 지수, 그리고 독립 감사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검증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 계약서, 건축 계획서 또는 기타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한 증빙 서류 및 참고 자료

기술 표준 :

- **데이터 표준화** :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시보드는 국내 및 국제 보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단계적 도입** :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시보드는 단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접근성** : 대시보드는 웹 기반으로 모바일에서 접근 가능해야 하며, 명확성을 위해 시각화 도구를 갖춰야 한다. 독립적인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CSV 파일과 API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므로,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이버 보안** :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조작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대시보드는 책임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재정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거버넌스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한다.

C. 데이터 활용 및 컨설팅

IAB는 감사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에 재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프레임워크는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1. 평가 보고서

감사를 받은 국가는 투명한 평가 보고서를 받는다. 이 문서는 객관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정부와 시민 모두가 재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

- ① 지출 구조 분석 (과잉 투자 부문 vs. 과소 투자 부문)
- ② 국제 비교 지표
- ③ 위험 요인 식별

2. 투자 제안서

감사에서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감사 기구는 재정 자원 재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한다. 이는 진단을 넘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구의 역할을 확장한다.

내용 :

- ④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문 및 필요 자금 규모 식별
- ⑤ 예상 투자수익률(ROI) 및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⑥ 이행 시나리오 (단기, 중기, 장기)

3. 정책 권고 보고서

투자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구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정책 권고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투자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내용 :

- ⑦ 필요한 입법 및 규제 개혁
- ⑧ 행정 절차 개선 (예산 심의,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 ⑨ 민관 협력 메커니즘 (예: PPP, 참여 예산제)

4. 자금 조달 및 지원

UN 산하 기구로서의 권위를 활용하여, 국제 감사 기구는 외부 자금 및 금융 패키지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권고안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양허성 대출, 긴급 유동성 지원, 맞춤형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제안은 공개되어 시민 참여를 더욱 촉진한다. 또한, 권고안을 국가 이익과 일치시키고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구는 성공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 컨설팅의 목표는 이 제안서 전반에 걸쳐 설명된 바와 같이 더 나은 배분이 가능한 자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기구는 이 제안서의 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자금을 찾아 적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금 조달이 정책 실행의 주요 장벽임은 자명하며, 따라서 이는 IAB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들이 권고안을 개발할 때의 주요 초점이 된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찾아 배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우리는 IAB가 자립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UN 회원국 분담금, 자발적 기부금, 또는 IMF 및 세계은행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디지털세 관련 지침

IAB는 또한 2030년까지 최소 5개의 국경 간 데이터 공유 허브를 설립할 것이다. 이 허브들은 디지털 거래 장벽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지역 지침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IAB는 이러한 세금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컨설팅하고 이 새로운 분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평가 및 책임성

신뢰성과 장기적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립한다.

- **메타 감사** : IAB는 10년마다 자체 운영에 대한 메타 감사를 실시한다.
- **성과 지표** : 성공은 부패 감소, 대중 신뢰 증진, 재정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정책 결정에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사용된 증거를 통해 측정될 것이다.
- **지속적 개선** : IAB는 새로운 감사 기술(예: 블록체인)이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기준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성공은 기존의 국제 거버넌스 지표의 개선과 개방형 재정 보고 기준의 채택률을 통해 측정될 것이다.

2.3 사회 정의와 평등

핵심 사명과 가치

우리의 사명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위해 평등을 증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 보건, 고용, 의사결정 분야의 장벽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명은 다양성이 공동체를 강화하고, 회복력 있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는 모든 목소리가 경청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중심에는 S.O.C.I.A.L.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Safety), 개방성(Openness), 연민(Compassion), 포용(Inclusion), 접근성(Accessibility), 해방(Liberation)을 옹호하며, 모든 개인의 정의, 평등,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 S – 안전(Safety) : 모든 개인을 위한 안전과 보호, 유해함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보장.
- O – 개방성(Openness) :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모든 정체성, 가치, 신념에 대한 이해.
- C – 연민(Compassion) : 인간의 존엄과 존중을 지키는 연민과 돌봄.
- I – 포용(Inclusion) : 공동체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참여에서의 포용과 평등.
- A – 접근성(Accessibility) : 차별 없는 기본적 필요, 기회, 권리에 대한 접근성.
- L – 해방(Liberation) : 역량 강화, 교육, 인권 증진을 통한 해방.

주요 과제

사회 정의 및 평등과 관련된 전 지구적 과제는 만연한 차별과 세계인권선언(1948)에 명시된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를 포함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 학대, 구조적 불평등에 계속해서 직면하는 취약 계층의 보호와 포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인종 및 민족 소수자, 종교 공동체, 성소수자(LGBTQ+), 원주민, 이주민, 난민을 포함한 이들 취약 계층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빈번하게 경험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23년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U 회원국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피부색, 민족,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많은 회원국에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은 여전히 불충분하고 일관되지 않는다.

차별은 보건, 주거, 고용, 안전, 식량 안보에 대한 접근 제한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기술, 공정한 언론에 대한 장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Human Rights Watch, 2025).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 여성, 소녀에 대한 성적 학대는 회원국 및 여러 기관의 법적 조치와 보호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낸다. 포괄적인 성교육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교, 직장 및 기타 기관에서의 성희롱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안전하지 않은 학습 환경은 난민, 장애인, 성별 또는 종교적 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및 소외 계층 학생들을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한다. 이들은 종종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며 평등을 주장할 때 폭력, 위협 또는 보복에 직면한다. 또한, 많은 지역 사회는 데이터 관리 기술과 의사결정 역량이 부족하며, 이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와 실행

을 저해한다. 이러한 현실은 배경이나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 기회, 보호를 보장받도록 하는 포용적인 시스템, 평등한 정치 참여, 적극적인 조치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전과 해결 방안

우리의 비전은 배경, 정체성,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존엄, 평등,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성공이란 모든 사람이 주거, 식량, 보건,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하고, 투명성과 포용성을 지키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학교에 공감, 인권, 포괄적 성교육, 다양성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과 교육자가 차별 없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시민 사회, 공동체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공은 빈곤과 불평등 감소,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 학교 내 공감 및 포용 지표 개선, 그리고 거버넌스와 사회 발전에 소외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측정될 것이다.

정책 권고

1.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한 단일 창구

'Data4Justice 플랫폼'과 '기본적 필요 단일 창구 패키지'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사회적 포용,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적 이니셔티브를 구성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통합된 기본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정부, 시민 단체, 지역사회가 불평등을 해결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모든 개인이 존엄성, 정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한다. 이 플랫폼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 자금 조달 및 확장 :

-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본적 필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여, 안전한 공간, 심리사회적 지원, 동의 교육, 안전 인식, 동료 상담, 생활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센터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업부를 통해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식량 허브를 설립하여 식량 불안을 줄이고, 외딴 지역과 도시 근교 지역의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100% 접근성을 보장하며, 취약한 도시 및 농촌 원주민 공동체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조하고, 소외 계층이 예방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 보건 센터로부터 5km 이내에 거주하도록 보장한다.

○ 신고 도구 강화 :

- 핫라인, 모바일 앱, 지역사회/학교 헬프데스크, 그리고 도시 기반 인권 보호관 배치와 같은 신고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개발하여 지원 및 신고 채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전국적 인식 제고 및 동원 캠페인 :

- 아동 및 성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강화하며, 예방, 낙인 감소, 도움 요청 행동, 문화적 민감성을 강조한다.
- 학대와 차별에 대한 침묵을 깨기 위해 부모, 교사, 종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 법 집행 기관, 청소년과의 지역사회 토론을 촉진하고, 전통적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령과 문화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파한다.

○ 누가 (WHO) :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단위,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교육부, 정부 및 독립 기관, 재단, 사회관계부처

○ 어떻게 (HOW) :

- 'Data4Justice 플랫폼'은 연구자, 전문가, 시민 단체를 국제 파트너와 연결하여 데이터 관리 및 증거

기반 의사결정 기술을 구축한다. 이는 국가 정책, 사회 프로그램, 옹호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세트, 보고서, 자원을 제공한다.

- 본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과 심리사회적 지원, 옹호, 생활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센터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및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이는 인권 교육을 공식 및 비공식 시스템에 통합하고, 신고 및 대응 메커니즘(핫라인, 모바일 앱, 학교 및 도시 헬프데스크)을 장려하며, 아동 및 성 기반 폭력에 맞서기 위한 전국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주도한다.
- 상호 보완적인 '기본적 필요 단일 창구 패키지'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존엄성을 높이는 간소화된 지역사회 기반 전달 체계를 통해 식량, 주거, 보건, 교육, 고용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보장한다.

○ 어디서 (WHERE) :

- 지역 전반의 국가 및 지방 기관
- 취약한 도시 및 농촌 원주민 지역
- 외딴 지역 및 도시 근교 정착지
- 정부, NGO, 협동조합, 시민 단체를 연결하는 지역 단위
- 지역 센터 및 NGO를 통해 시행되며,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이니셔티브
- 지역사회, 학교, 도시 – 지역적으로 시행되나 지역 단위로 조정됨

○ 언제 (WHEN) :

- 지역 데이터 시스템 (Data4Justice): 2028년까지
- 인식 제고 및 동원 캠페인: 2030년까지 지속적 또는 연 단위로 시행
- 기본적 필요 기금 및 단일 창구 패키지: 2027년까지 설립하고 2029년까지 운영

2. 이중적 차원의 조치를 통한 소외 및 취약 계층 포용 강화

본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태도와 제도적 구조를 모두 다룸으로써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진정성 있는 대표성을 증진하며, 거버넌스 시스템 내에 포용을 내재화하여, 사회 모든 계층에서 다양성과 평등이 기념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 누가 (WHO) : 국가 정부 (지방 당국,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

○ 어떻게 (HOW) :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조치를 결합한 다차원적 정책 접근법을 채택한다.

- 사회적 차원 (문화적, 행동적 변화 촉진 목표): 다양성을 기념하고, 고정관념을 넘어서며, 모든 공동체를 위한 소속감을 증진하는 지속적인 국가 및 지역 캠페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대표성을 증진한다.
- 정치적 및 제도적 차원 (구조적 포용 보장 목표): 대표 할당제, 다양성 벤치마크와 같은 포용적 거버넌스 조치를 채택하여 형평성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지속한다.

○ 어디서 (WHERE) : 국가 및 지역 수준 모두에서 시행하며, 지역적 맥락, 문화,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캠페인과 이니셔티브를 현지화하여 적용한다.

○ 언제 (WHEN) : 사회적 인식 캠페인과 포용 프레임워크를 즉시 착수(단기: 1-2년)하고, 이후 정책 개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중기적(3-5년)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3. 의무적 상호문화 공감 및 인권 교육

국가 교육부와 대학 등 독립 교육 기관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감, 인권, 그리고 정체성의 다양성 (인종, 성별, 문화)과 같은 학문적 지식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의무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존중, 포용, 그리고 안전한 학교라는 공유된 문화와 원칙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다.

○ 누가 (WHO) : 국가 교육부, 독립 교육 기관

○ 어떻게 (HOW) :

- 각국의 교육부는 공감, 인권, 정체성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기초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동시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에 기반한 것과 같이 지역적으로 유의미한 소수자 정체성을 식별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시행에 앞서 콘텐츠와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한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될 것이다. 각 학교에는 이니셔티브를 총괄할 책임 트레이너가 임명되며,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전달하도록 훈련받은 교사들의 지원을 받는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 설문조사,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학교 통계,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측정 지표에는 공감 척도,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행동 관찰, 정서적 인식을 보여주는 성찰 일지,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과 또래 관계의 개선을 나타내는 괴롭힘 또는 징계 사건의 감소 등이 포함될 것이다. 시범 운영에서 얻은 통찰력은 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 전 지속적인 개선에 활용될 것이며,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고 질과 영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과정은 세 가지 핵심 영역을 다룰 것이다 :

- **공감** : 부정적 감정 대처, 관점 수용, 적극적 경청, 정서적 소양, 상호 존중, 갈등 완화에 초점.
- **인권**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집단적 영역에 걸친 역사, 중요성, 사례 포함.
- **정체성의 다양성** : 소수 집단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역사, 공동체의 강점에 대한 인식을 증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존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

- Empathy Studios의 **공감 프로그램** : 학생들의 품행, 정서적 인식,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케임브리지 대학교, n.d.)
- Hampshire 교육청의 '**권리, 존중, 책임**' 프로그램 : 학생들의 존중심과 협동심이 증가하고, 공격성과 방해 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Covell & Howe, 2007)

○ 언제 (WHEN) : 4개월 내 프로그램 골격 생성, 2년 내 시범 운영, 시범 운영 종료 후 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보급

2.4 기술 혁신과 윤리

핵심 사명과 가치

우리의 핵심 사명은 사회의 선(善)을 위해 혁신하며, 인간과 사회의 필요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인류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혁신은 진보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공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든 기술 발전은 그것이 개인, 공동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더 넓은 사회적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을 환경 보호, 사회적 복지, 경제 성장을 조화시키는 장기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려 깊은 설계와 책임감 있는 적용을 통해,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공동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미래를 그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술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사용에 대한 확신을 주는 윤리 원칙에 따라 운영됨을 보장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우리가 사회와 혁신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바탕으로 한다. 책임성은 우리 가치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혁신이 가져오는 도덕적,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결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윤리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동선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우리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의 중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며,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지킨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전념하며, 우리가 설계하고 배포하는 기술이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유익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불평등을 줄이며, 인류의 공동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

1. 인공지능 (AI)

- AI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AI 사용 방식이나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는 주로 AI 훈련 및 추론 작업량에 기인한다. AI의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과 표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 AI 개발의 영향은 사전에 충분히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배치 전에 사회적, 윤리적 유해성을 식별하기 위한 강력한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
- AI 개발의 주요 동력은 여전히 감시 및 전쟁 산업으로, 정부와 방위 산업체들은 정보, 표적 설정, 자율 시스템을 위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2. 데이터 프라이버시

- 우리의 개인 데이터는 당사자의 인지 없이 수집, 거래,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종종 불투명한 데이터 브로커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를 위반한다.

3. 인터넷 접근성

- 여러 국가에서 정부에 의해 인터넷 접근이 의도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이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차단 조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위반한다.

4.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 인터넷과 기타 디지털 도구는 아이디어 전파를 위한 플랫폼이자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독일 글로벌 및 지역 연구소(GIGA)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조차 청소년과 성인의 30~35%만이 최소 수준의 디지털 시민성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과 해결 방안

비전 :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은, 기술이 지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고양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미래를 그린다. 이는 인공지능이 윤리에 따라 인도되고, 포용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투명성에 의해 구동되고, 환경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의미한다.

해결 방안 : 우리가 그리는 변화는 기술이 인류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부여하는, 디지털적으로 포용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이다. 성공이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보편적 접근, 엄격한 감사와 감독에 따라 운영되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시스템, 사생활 보호·공정성·책임성을 지지하는 청년 포용적이고 권리에 기반한 정책,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활발한 청년 주도 디지털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되고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AI 혁신을 구상한다. 인간 중심의 교육과 혁신 연구소는 현실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감 기반의 창의적인 AI 해결책을 육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문 간 파트너십과 '인류를 위한 AI 청년 네트워크', 연례 'AI for Good 서밋'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협력은 디지털 전환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인간 중심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정책 권고

1. 모든 국가는 인터넷 접근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공식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현대 사회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필수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간 부문, NGO, 국제기구도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이 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2028년까지 인터넷 접근은 인권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정부는 모든 교육 기관에 걸쳐 디지털 시민성 교육 계획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가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한 정부 및 민간 부문 직원들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더 탄력적인 노동력에 기여해야 한다.

3. 정부는 모든 지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AI 개발 및 배포에 있어 투명성, 안전성, 포용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AI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윤리적, 법적, 보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과 같은 표준화된 AI 테스트 및 검증 프레임워크가 시행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가 아직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국제기구와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AI 기술 규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 지원, 정책 지침, 역량 강화를 제공해야 한다. 2030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부는 AI 개발자, 투자자, 사용자에게 AI 기술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감사 관행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무적인 ESG 모니터링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며, AI 배포에 관여하는 민간 부문과 개인 이해관계자 전반의 책임성을 보장할 것이다. 내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채택해야 한다.
5. 2028년까지, 청년 개발자들이 사회적 이익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포괄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정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진 개발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교육자 및 산업 전문가를 고용하여 청년들에게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제품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프로세스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최초 출시 이후 제품의 지속적인 통합 및 개발을 향해 개발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2.5 평화와 협력

핵심 미션과 가치

우리는 다양성, 평화, 그리고 대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 말, 또는 신념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진정으로 경청하고 책임을 지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비인간화함으로써 반응하며, 우리가 메우고자 주장하는 바로 그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차이점이 포용되고, 배움이 존중되며, 갈등이 적대감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미래를 촉구합니다. 오늘날, 심화되는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허위 정보는 사회를 갈라놓고 있으며, 진정한 경청은 희귀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분열보다는 토론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평생 학습 및 디지털 리터러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한국의 학생 주도 대화 모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진실이 두드러집니다: 평화는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상징적인 목소리가 아닌 진정한 의사 결정권자가 되는, 청년 주도의 중재 및 거버넌스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관용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재건하고 우리의 공유된 미래를 연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이해, 용기, 그리고 연민입니다.

주요 과제

1.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파편화

증가하는 양극화와 광범위한 허위 정보는 갈등의 주요 동인이 되었으며,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년들은 에코 체임버(echo chambers,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환경)와 분열적인 내러티브가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민주적 대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2. 지속적인 불평등과 불균등한 접근

경제적 격차와 양질의 교육, 자원, 그리고 의사 결정 기회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은 계속해서 불안정성과 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평화, 참여,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구조적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3. 공감과 상호 문화 이해의 침식

공감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눈에 띄는 감소는 문화적, 이념적 격차를 넓혔습니다. 상호 이해의 이러한 침식은 민족, 종교, 사회적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저해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4. 평화 구축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격차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청년들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디지털화된 사회의 삶을 준비시키는 데 미흡합니다. 비판적 사고, 정서 지능,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족은 반(反)지성주의와 온라인 허위 정보의 증가와 결합되어 정보에 기반한 건설적인 대화를 저해합니다.

5. 거버넌스에서의 제한적인 청년 참여

갈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평화 구축 및 거버넌스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체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영향력이 있기보다는 상징적인 경우가 많아, 정책 해결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비전과 해결책

우리는 분열 대신 대화가, 다양성이 단순히 관용되는 것을 넘어 평화와 발전의 기반으로 찬양되는 세상을 그립니다.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허위 정보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면 우리가 배우고, 이끌고, 경청하는 방식을 재구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공감, 책임감, 그리고 협력이 교육과 거버넌스 모두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 그리고 청년들이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화해, 정책, 그리고 공유된 미래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 구축을 교육에 내재화하여, 모든 학습자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실험실 역할을 해야 하며, 학생 주도 대화,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 윤리적 추론, 상호 문화 이해, 그리고 정서 지능을 함양해야 합니다. 교실을 넘어, 정부와

기관들은 청년들에게 평화 및 안보 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청년 주도 중재 및 거버넌스 구조를 지역 인민 회의부터 지역 청년 평화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설립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정책과 다각적인 협력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교육부, 법무부, 청년부 등과 시민 사회 및 다자 기구들은 교육 개혁, 시민 참여, 그리고 갈등 해결을 연결하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을 대화와 의사 결정의 촉진자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는 분열이 있던 곳에 신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분명합니다: 공감을 정책으로, 대화를 행동으로, 다양성을 단결로 바꿀 수 있는 세대, 즉 용감하게 경청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연민을 가지고 주도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세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책 권고 사항

1. 평화 구축 교육을 교육과정에 통합

-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수준 전반에 걸쳐 갈등 해결, 대화, 공감, 상호 문화 이해를 가르치는 평화 교육 모듈을 개발합니다.
- 누가(WHO) : 교육부, UN 기구(UNESCO, UNRISD, UNICEF), OECD, 지역 기구(EU, 영연방 등), 청년 협의회, 지역 교육 위원회.
- 언제(WHEN) : 2028년까지 시범 프로그램 운영; 2030년까지 전국적 시행.
- 어떻게(HOW) : 중재, 스토리텔링, 지역사회 대화의 실제 연습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① 교실에 학생 주도 토론 통합

토론 주제는 각 지역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춰 현재의 사회적 긴장과 널리 퍼진 허위 정보 영역을 반영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각 주제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주장을 모두 제시하도록 요구됩니다. 시작 시, 학생들의 절반은 안전에 찬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션 중간에 팀은 입장을 교환합니다. 이 방법은 구조화되고 존중하는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분석적 추론, 공감 및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역별 적용 :

- 아프리카 및 중동 : 많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사회에서 학교는 종종 공개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합니다. 학생 주도 토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안전하고 기능적인 학습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 학교, 청소년 센터, 심지어 지역 회관에서 저비용의 “평화 클럽”이나 “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지역 및 국가 언어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NGO는 시각적 토론 도구 키트와 교사 연수로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풀뿌리 플랫폼은 청년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며 표현하며, 민족적 또는 종교적 경계를 넘어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상호 문화적 교량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 **아시아 태평양**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안전, 인식,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2030년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정부 대표로 구성된 평등 학습 위원회가 교육 장벽을 해결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IT 접근성 및 기술 훈련을 촉진할 것입니다. UN의 지원을 받는 정부는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성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입니다. 녹색 교육과정 및 인력 전환 계획은 2026년까지 모든 학교 및 직업 센터에 기후 과학 및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고, 2028년까지 10,000명의 인증된 녹색 일자리 연수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부처와 ASEAN, UNESCO, 세계은행과 같은 지역 기구는 장학금, 기술 훈련, 디지털 부트캠프를 통해 지속 가능성, 시민 참여 및 디지털 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이 지역 전반에 걸쳐 평등한 학습 기회와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장할 것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 시민권을 위한 비판적 토론 포럼

○ **한국** : 2028년부터 교육부는 모든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사회 문제, 문화, 고정관념과 같은 주제에 대해 학생 주도의 토론 중심 수업을 필수로 개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수업들은 전통적인 시험 대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동료 및 교사 평가로 대체될 것입니다. 교사는 비판적, 윤리적, 증거 기반 대화를 이끌기 위해 문제 기반 학습(PBL) 및 질문 기반 학습(QBL)에 대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목표는 주간 토론에 대한 학생 참여율을 2030년까지 27%에서 50%로 높이고, 비판적 사고 점수를 15점 향상시키며, 동료 평가 및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유럽 평의회 및 OECD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공감, 추론, 시민 책임감의 지표를 통해 진전 상황을 측정하여, 독립적이고 비판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사고를 육성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 **유럽** : 유럽은 인권, 시민, 다문화, 금융, 디지털, 환경 리터러시를 통해 회복력, 평등,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포용적이고 평생 지속되며 미래 대비가 된 교육 시스템을 구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량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소외된 집단의 접근을 보장하며, 교육 예산의 5-10%를 포용 프로그램에 할당하고, 능동적 및 디지털 방법론에 대한 교사 연수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30년까지 AI 학습 허브와 교차 기관 프레임워크는 회원국 간의 자격을 연결하는 공통 인정 및 교육 포털의 지원을 받아 윤리적 기술 사용에 대해 100만 명의 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실 확인, 알고리즘 인식,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자 훈련을 통해 허위 정보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개발되고 2035년까지 시행될 핵심 교육과정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을 민주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윤리적으로 기반을 둔 유럽의 토대로 자리매김합니다.

② 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교육과정 요소로 지정

○ 허위 정보, 정치적 양극화 및 온라인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인 미디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접근 권한을 제공할 때 미디어 오용,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허위 정보(disinformation)에 대한 비판적 필터링 메커니즘을 가르칩니다.

○ **누가(who)** : 교육부, 미디어 협의회 및 기술 기업.

- **언제(WHEN)** : 2029년까지 프레임워크 개발; 2035년까지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
- **어떻게(HOW)** : 교육자와 청년 리더를 훈련시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사실 확인, 알고리즘 인식 및 비판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지역별 적용 :

- **아프리카 및 중동** : 이 지역의 많은 지역, 특히 농촌 아프리카에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비현실적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온라인 콘텐츠에만 집중하는 대신, 라디오, 지역 스토리텔링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허위 정보를 인식하는 실질적인 수업을 통합해야 합니다. 교사는 지역 뉴스, 소셜 미디어 소문 또는 지역사회 행사의 예를 사용하여 비판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통신사 및 NGO와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에 개방형 "미디어 리터러시 코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연결된 청년과 연결되지 않은 청년 모두에게 포괄성을 보장하고 혐오 발언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 **북미** : 초·중등 교육에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시행하도록 함
 - 내러티브 형성을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오보와 허위 정보 만연을 해체
 -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해소: 엘리트주의가 교육의 필연적인 부정적 결과라는 오명
 - 청년 및 노년층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목표로 하는 평화 및 협력 교육 (예: 파시스트 내러티브 퇴치)
 - 교육 영역에서 파시즘의 결과로 형성되는 고립/양극화 관행 해소

③ 교육에서의 사회 정서 학습 (SEL)

- 공감, 감정 조절 및 협력 학습을 교실 관행에 통합하여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다양성 인식을 높입니다.
- **주요 관계자** : 교육부, 교사 연수 기관 및 NGO (UNICEF).
- 감성 지능과 연민을 함양하기 위해 체험 학습 및 대화 기반 활동을 활용합니다.

지역별 적용 :

- **아프리카 및 중동**: 이 지역의 많은 청년들은 이주,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트라우마에 직면하며 성장합니다. 외부 SEL 모델을 도입하는 대신, 프로그램은 공동체 기반이어야 하며, 연대, 연장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집단적 치유와 같은 문화적 가치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술, 음악, 전통 스토리텔링, 스포츠는 감정 교육을 위한 저렴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후 지역에서는 교사와 청년 멘토에게 트라우마 증상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 협력 및 정서 지능에 중점을 두므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신뢰를 재건하고 분열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세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 **북미** : 북미 전역의 교육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이동성과 시민 참여를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은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포괄적인 교육과정 부족,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고소득층 지역 학생들보다 중퇴할 가능성이 최대 5배 더 높습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의 차이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초래하며, 이는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 **청년 우선 교육 이니셔티브(YFEI)는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합니다.**
 - 교육 내 포괄성 증진
 - 공평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확립
 - 교육을 통해 소외된 공동체 지원
 -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공평 플랫폼 구축.
 - 2030년까지 YFEI는 더 높은 식자율, 중퇴율 감소, 시민 참여 증가, 그리고 고등 교육 및 직장 성공으로의 더 강력한 경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
-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과 문화적 관점을 축적하는 디지털 국제 포럼(상향식 아카이브 문서화)**
 - 배움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피함
 -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왜곡된 허위 정보의 유포를 최소화
 - 글로벌 시민 교육: 공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호 문화 교류 장려
 - 하나의 "올바른" 내러티브를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내러티브 존중하고 오명을 벗김
 - 토론에서 특정 내러티브가 다른 내러티브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 여러 이슈가 동시에 초점이 되도록 허용

2. 중재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 및 지역 기관 설립

- 지역사회 및 지역 수준에서 청년 주도 중재 센터와 갈등 해결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누가(WHO)** : 법무부, 청년부 및 시민 사회 단체(NGO).
- **언제(WHEN)** : 2028년까지 기본 틀 마련; 2030년까지 운영.
- **어떻게(HOW)** : 대화 촉진, 회복적 정의 및 지역사회 화해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적용 :

- **아프리카 및 중동** : 이 지역의 갈등 해결은 종종 연장자, 종교 지도자 또는 지역 족장에게 의존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청년 중재자들은 분리되어 활동하기보다는 이러한 전통적인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회 내에 "청년 평화 중재 데스크"를 설치하여, 훈련받은 청년들이 연장자 및 시민 사회 행위자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간 대화에 대한 단기 인증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규모에서는 아프리카 연합 평화안보이사회의 및 아랍 연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중재 허브를 재정 지원, 연구 및 훈련 기회로 지원하는 청년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층적 거버넌스 및 혁신 구조를 통해 청년 리더십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 학습, 혁신 및 기업(YOUTH LIVE) 허브는 금융 리터러시, 리더십 훈련 및 SDG(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위한 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허브는 APCA, UNESCAP, ASEAN, ILO와 같은 기관들에 의해 시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시민 교육 및 청년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개방형 정부 및 시민 기술 플랫폼을 통해 민주적 리터러시와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1년 이내에 시범 운영하고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청년부, 교육부, 외교부는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를 공식화하도록 촉구되며,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는 청년을 의사 결정 역할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ASEAN, SAARC 및 태평양 청년 협의회가 UNDP, UNFPA, UNESCO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년 의회 및 자문 위원회를 창설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에 내재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 **무엇을(WHAT)** : 공식적인 역할을 가진 청년 정책 위원회 창설
- **누가(WHO)** : 국회 및 청년부
- **언제(WHEN)** : 2026년: 국가 회의; 2027년: 지역 포럼; 2028년: 공공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 **어떻게(HOW)** : 자문 및 투표 역할을 가진 위원회 설립; 영향을 미친 공공 정책 수로 측정
- **어디서(WHERE)**: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의회

○ **유럽 및 한국** : 유럽과 한국 모두 거버넌스 및 시민 참여의 핵심 요소로서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럽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역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 위원회 내 청년 의장직 설립,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을 통해 리더십을 구축하는 다문화 대학원 프로그램 시작,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포괄적인 대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영향을 보장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받아 실제 정책 결정에 청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DSN Youth Korea, 한국청소년재단, UNESCO YoU CAN과 같은 청년 조직은 AI, 윤리, 평화 구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도록 장려됩니다. 2030년까지 교육 및 정부 구조에 청년 자문 역할을 공식적으로 내재함으로써, 양 지역은 상징적인 포함을 넘어 의사 결정에서 진정한, 측정 가능한 청년 리더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3. 청년 거버넌스 메커니즘 제도화

- 평화 및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 **누가(WHO)** : 중앙 정부, UN 청년 특사(UN Youth Envoy) 및 지역 기구.
- **언제(WHEN)** : 2028년까지 청년 참여 쿼터 채택; 2030년까지 이행 모니터링.
- **어떻게(HOW)** : 국가 및 지역 평화 전략에 대해 자문할 권한을 가진 청년 평화 위원회를 창설합니다.

지역별 적용 :

- **아프리카 및 중동**: 거버넌스에서 청년 참여는 제한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채 대체로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상징적인 대표성에서 진정한 포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평화, 교육 및 혁신 관련 부처에 청년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할당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내에 분산된 ***청년 정책 연구소(Youth Policy Labs)***를 운영하여, 젊은 시민, 지방 공무원 및 민간 행위자들을 모아 지역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청년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국가 및 지역 우선순위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협력 프레임워크는 민주적 회복력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교육과 지역사회 기반 중재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편협함을 조장하는 종교 간 및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교육과 청년 협의의 메커니즘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시민과 국가 기관 간의 개방된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참여적 중재를 거버넌스에 내재하도록 장려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에너지 및 데이터 주권(CEDS) 허브는 대화, 지속 가능성 및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분산된 센터 역할을 하여, 참여형 의회를 통해 농촌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2027년부터 이 허브들은 국경 간 데이터 외교 원탁 회의도 개최하여, 투명하고 지역사회 중심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 협력과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할 것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 무엇(WHAT) : SDG(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지역 청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누가(WHO) : 외교부 및 지역 기구(CELAC 등)
 - 언제(WHEN) : 2027년까지
 - 어떻게(HOW) : 청년들이 준비하는 대안적인 “그림자 보고서(shadow reports)”를 포함한 지역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 **장소(WHERE)**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모든 국가에서
- **한국** : 한국의 평화 및 중재 전략은 장기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도구로 교육, 시민 대화,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강조합니다. 학교는 공감, 소통 기술, 그리고 갈등 해결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토론 기반 학습을 채택할 것이며, 이는 교실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모두에 통합될 것입니다. 시민 사회 단체는 풀뿌리 중재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학교, 지역, 온라인에서 공개 대화, 포럼 및 청원을 개최하도록 장려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는 지역 간의 교육 및 인프라에 투자하여 지역 균형을 강화하고, 서울과 농촌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며, 지속적인 지역 안정과 포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유럽** : 우리는 청년들이 능동적인 의사 결정자가 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공통의 기반을 찾으며, 협력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럽을 구상합니다. 다음 사항들은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극화를 방지하는 국가 및 지역 중재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

- 공동체가 포용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중립적인 중재 공간 창설.
- 집단 행동(물리적 인민 회의): 정부,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인민 회의(People's Assemblies)를 풀뿌리 중재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격월로 시행되며, 국가 법규에 포함되고, 지역 NGO를 통해 조정됩니다.

○ **북미** : 이 제안은 갈등이나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에서 청년 대표 및 평화 화해를 위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정책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 기관과 자금 조달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NGO의 전문성과 현장 통찰력을 인정하여, 이들을 외부 계약자가 아닌 역량 구축 파트너로서 평화 구축 구조에 공식적으로 통합하도록 촉구됩니다. 또한, 모든 대사관은 문화 및 공공 외교 예산의 최소 15%를 청년 주도 평화 이니셔티브에 할당하고, 이를 주재국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영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또한 글로벌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보장하며, 지역 평화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매핑이 포함됩니다.

2.6 집단 행동과 연대

핵심 미션과 가치

집단 행동은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와 광범위한 지원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고 민주적 규범과 제도가 파괴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연대와 지역 공동체 그룹을 만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실패했거나 심각한 실패 위험에 처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취약 국가 지수(Fragile States Index)에서 '지속 가능'하거나 '매우 지속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국가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된 세계의 건설과 청년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그룹 창설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집단 행동을 통해 실현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청년 조직가들이 수많은 성공에 환호하고 더욱 통합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역과 부문을 넘어 서로를 지원하고, 모두를 위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때 일어납니다.

청년은 조직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간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덜 평등하고, 덜 민주적이며, 덜 지속 가능하고, 더 오염된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도 지속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책임감을 요구하고, 정부에 정직성을 고취하며, 권력이 공정하게 재분배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정부에 변화를 추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미래 세대를 지원할 지속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과제

1. 현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광범위한 불평등과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품에 대한 접근 부족입니다. 청년들에게 특히 어려운 점은 종종 고용 안정성인데, 특히 장애인이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이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신체의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청년들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며, 그들이 다가올 세대와 함께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2.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징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감이 부족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관련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보급하도록 보장하고, 정부 보고서가 부정확할 경우 다른 정보 출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효과적인 집단 행동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입니다.
3. 청년 참여는 NGO, 청년 클럽, 협동조합 및 연합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라는 달성 가능한 이상에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기관과 조직이 유지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더욱 능동적이고 권한이 부여되며 효과적인 청년 리더십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교육은 종종 자금 지원이 부족하고 많은 젊은 학생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며, 그들의 성장을 억압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집단 행동 및 조직화 노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무지(ignorance)로 인해 서로 다른 지역의 청년 리더들이 협력하는 것이 방해됩니다. 이해와 국제적 연대에 뿌리를 둔 교육을 통해 힘을 얻고, 교육받고, 배우지 않은 상태(unlearned)로, 열린 마음을 가진 리더들을 필요로 하는 가치 기반 리더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청년들은 자신이 포용되고 환영받는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비전과 해결책

우리는 리더십과 의사 결정이 이익이 아닌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사회를 구상합니다. 집단 행동이 정책을 형성하고, 모든 시민, 특히 청년 인구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회입니다. 하나의 손뼉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으며 정부, 시민 사회, 청년 간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특히 소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공평성, 투명성, 책임감 및 포용을 약속하며,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할 때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NGO와 지역 공동체 조직의 지원을 받습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가치를 따르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네 가지 관점에 따라 지시되는 정책에 의해 구현됩니다 :

- 접근성(Access) : 연결성 및 기기 격차에 대한 장벽을 진단하고 파트너를 동원하는 평등 학습 위원회를 통한 접근.
- 수용성(Acceptability) : 농촌 청년과 소수자들이 해를 입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성 리더십 및 안전한 환경 메커니즘을 통한 수용성.
- 질(Quality) : 녹색 및 디지털 일자리에 맞춰진 디지털 및 기후 기술 파이프라인을 통한 질.
- 책임감(Accountability) : 의사 결정에 있어 청년 공동 창조 단위의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책임감.

정책 권고 사항

1. 청년 주도 NGO 및 협동조합 연합

이 계획은 지역, 국가, 지역 권역(regional), 그리고 국제 NGO 및 협동조합을 연결하는 상호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어 협력과 옹호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이크로(지역사회/학교), 메조(도시/주/국가), 그리고 매크로(지역 권역/글로벌)의 세 단계로 구조화된 이 플랫폼들은 소규모 조직들이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더 큰 규모로 공유된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더불어 소외되고 취약한 청년들이 관리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동시에,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정부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거나 불완전할 수 있는 곳에서 중요합니다. NGO와 협동조합을 여러 수준에서 연결함으로써, 이 정책은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지역 목소리를 증폭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집단 행동을 이끌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 공간을 확장하고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여, 모든 공동체에 걸쳐 포용성, 평등, 공평성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표 :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수준에서 NGO와 협동조합을 연결하는 청년 주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보고를 통해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조정된 옹호 활동을 강화하며, 시민 공간을 확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참여 및 고용 가능성을 구축합니다.
- 주요 관계자 :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수준에서 연합을 이끌며, 소외되고 취약한 청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청년 리더십 팀은 NGO, 협동조합, 학교, 공공 민간 기관과 협력합니다. 파트너는 멘토, 단기 훈련, 인턴십/견습직 자리를 제공합니다.
- 시기 및 방법 (HOW) : 시범 공동체를 선정하고, 청년 리더를 임명하고, 간단한 MOU에 동의하며, 명확한 KPI와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여 구축합니다.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하고 개선합니다. 준비된 지역을 추가하고, 템플릿과 보고서를 표준화하며, 유급 청년 펠로우십을 시작하고, 간단한 공개 대시보드를 발행하여 확장합니다. 다년도 자금 확보 및 파트너 표준 운영 절차에 워크플로우를 포함하여 제도화합니다.

- **KPI 및 측정** : 명확한 사례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각 보고서를 기록하고, 분류하며, 확인 및 익명화하고, 적절한 파트너에게 전달하며, 종료될 때까지 추적합니다. 공유 파트너 디렉토리, 헬프 데스크 및 간단한 사례 보드를 유지합니다. 온보딩된 파트너 수, 훈련/배치된 청년 수, 확인/전달/종결된 보고서 수, 종결까지 걸린 평균 일수, 검증된 데이터 세트 및 정책과 같은 KPI를 모니터링합니다.
- **운영 범위** : 마이크로 수준은 학교, 바랑가이(필리핀 지역 단위) 및 커뮤니티 센터, 협동조합 지점을 포괄합니다. 메조 수준은 도시 또는 주 단위 장소와 국가 파트너 사무실에서 하이브리드 회의로 만납니다. 매크로 수준은 분기별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는 지역 권역별 협의회를 이용하며, 지역별로 순환하는 하나의 글로벌 대면 회의를 가집니다.

2. UN 청년 대표 프로그램 강화

- 현재 유엔 청년 대표 프로그램(United Nations Youth Delegate Program, UNYDP)은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권고 사항의 첫 번째 부분은 유엔이 모든 회원국에 청년 대표 프로그램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없는 회원국이 있다면, 유엔은 이를 위한 전용 기금을 마련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유엔 청년 대표 프로그램(UNYDP)은 평등한 대표성을 갖도록 장려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UNYDP는 각 회원국, 주 또는 지방을 대표하는 청년들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다면,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청년을 두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구 통계학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을 선출하기 위해, 해당 준주(substate) 또는 지방별로 지역 지도자, 부처 관계자, 해당 지방 또는 주의 공공 및 청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내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UNYDP에서 그들의 주 또는 지방을 대표할 청년을 선출할 것입니다.

이후, 회원국의 UNYDP는 다음을 담당하게 됩니다 :

- UN 청년 대표 프로그램의 전체 기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역량 및 거리에 따라 대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월 1회 소집되어, UN이나 중앙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 및 보조금을 통해 기본적인 필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풀뿌리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 중심의 리더십이 지역 및 권역별 정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 관행에 기여하고, 청년과 다른 취약 계층 구성원들을 지역 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년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종종 적절한 자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거나 자금을 빼앗지 않으면서 이루어집니다.
- 완전한 UNYDP가 설립되면, 모든 현직 대표들은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자신의 국가를 위한 유엔 청년 대사(United Nations Youth Ambassadors) 역할을 수행할 2명의 청년 대표를 선출할 것입니다. 이때, 각 UN 청년 대사직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 지역 우선순위를 통합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두 대표는 2년 동안 직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 이 직책은 유엔과 회원국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정규직이 될 것입니다.
- 모든 회원국의 UN 청년 대사들은 월 1회 대면으로 모여, 청년들에게 가장 잘 봉사하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가 및 국제 정책 제안을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 최종 정책은 검토와 공식 채택을 위해 적절한 유엔 기구에 제출될 것입니다.

3. 청년 기후 및 사회정치 보고 플랫폼

- **목표** : 청년들이 기후 변화 및 기타 풀뿌리 차원의 문제에 대한 실시간 기후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후 인식 디지털 플랫폼을 만듭니다. 이 플랫폼은 오보/허위 정보(mis/disinformation)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메커니즘을 따를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청년들을 정책 입안자 및 정부와 직접 연결하여, 정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하고, 청년들이 의사 결정 및 민주적 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플랫폼은 또한 글로벌 청년 기후 및 사회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민주주의에서의 청년 참여, 미디어에 대한 신뢰 문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리더들은 청년들과 일반 대중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해 지역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력하고 조직화하며, 다른 지역의 구성원들로부터 배워 그들의 노력을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많은 지역사회, 특히 기후 취약 지역에서 주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기금,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주요 기능** : 이 플랫폼에 통합될 또 다른 기능은 빠르게 퍼지는 허위 정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신속한 사실 확인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확인 메커니즘은 지속 가능성 노력과 청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즉시 작동하는 통합 "신뢰 점수(Trust Score)"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처럼 작동하여, 콘텐츠의 출처 신뢰도와 알려진 과학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즉시 녹색, 노란색 또는 빨간색 상태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적 번거로움 없이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하도록 보장합니다.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장은 훈련된 청년 사실 확인 조사단(Trained Youth Fact-Checker Corps)으로 전달되어, 사실 확인 과정을 플랫폼의 자금 지원을 받는 가치 있는 실습 훈련 기회로 전환시키고, 또한 수정된 모든 콘텐츠에 명확한 교육적 설명과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검증된 과학적 및 연구적 근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여 더욱 회복력 있고 정보에 입각한 공동체를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보고서는 검증, 태그 지정 및 대화형 지도에 시각화되어, 정부와 미디어가 실시간 데이터, 청년 주도 모니터링 및 정책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행 지역** (인도는 처음 2년간 이 정책을 시행할 시범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진행 상황과 결과를 측정한 후, 이 정책은 전 세계 모든 지역 및 대륙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
- 인도 전역.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므로 모든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대학교** : 더 나은 데이터 보고를 위해 청년 저널리즘 클럽과 멘토십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 훈련 및 아웃리치를 위해 지역 미디어 센터와 협력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 실시간 보고, 매핑 및 검증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기후 이니셔티브와 청년 녹색 일자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포함할 것입니다.

- **주요 관계자** : 인도 청년(15-30세), 중앙 및 지방 정부, NGO, 대학교, 미디어 회사(ABP 등). 또한 이 정책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국제 기구(예: UNICEF, UNDP) 및 민간 기술 파트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기후 및 사회정치 보고 플랫폼 이행 단계

- **1단계** : 시범 운영 (2026년 ~ 2028년)
 - 목표 : 2028년까지 30,000명의 활동 사용자 및 검증된 보고서 달성.
 - 고등학교 50%와 대학교 30% 참여.
 - 청년 주도 보고를 통해 영향을 받은 지역 정책 7개와 국가 정책 1개 달성.
- **2단계** : 인도 전역으로 플랫폼 확장 (2028년 ~ 2030년)
 - "청년 사실 확인 조사단(Youth Fact-Checker Corps)"을 설립하고 신뢰 점수(Trust Score) 시스템 통합.
 - 데이터 검증 및 훈련을 위한 정부, 학계 및 NGO 간의 협력 강화.
- **3단계** : 국제적 확장 (2030년부터)
 - 학교 및 청년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지역으로 확대.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건강, 교육, 안전과 같은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유.
 - 이러한 보고서들을 국가 간 비교하여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더 포괄적인 국제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

4. 청년 리더십을 위한 가치 기반 교육의 의무적 포함

- **현황** : 전 세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은 시민 학습, 윤리적 추론 및 비판적 참여보다는 표준화된 시험과 내용 암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문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도덕적 딜레마를 추론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거나, 공공 담론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이 배출됩니다. OECD의 'Education 2030' 및 유네스코의 '글로벌 시민 교육(GCE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등 교육 과정 중 절반 미만이 윤리, 시민 참여 또는 가치 기반 추론과 관련된 명시적인 학습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린 토론, 논쟁 및 참여 학습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남아 있어, 수동적인 학습을 강화하고 공감 및 민주적 역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가치 기반 교육의 이러한 글로벌 결핍은 불평등, 갈등, 기후 변화와 같은 공유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이며 협력적인 시민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 **비전** :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시민 의식, 합리적 사고, 윤리적 추론을 육성하는 글로벌 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상합니다. 모든 국가 교육과정에 가치 기반 교육과 학생 주도 대화를 포함함으로써, 전 세계의 청년들은 윤리적 리더십과 집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책임감 있고 공감하며 협력적인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관계자** : 유네스코(UNESCO), OECD, 유니세프(UNICEF)가 국가 교육부 및 지역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 **대상** : 전 세계의 모든 공립 및 사립 중등 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
- **시기 및 이행 계획** :
 - **2027년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발** : 유네스코-OECD 교육 태스크포스가 교육과정 표준, 교사 역량 모델 및 평가 기준을 포함한 가치 기반 교육(VBE)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참여 국가들은 포괄성과 문화적 관련성을 보장하며 국가 상황 및 언어에 맞게 이 프레임워크를 현지화할 것입니다.
 - **2028년 강사 훈련 및 시범 운영 준비** : 전 세계 강사를 위한 훈련 자료 및 디지털 리소스 개발. 국가 교육부는 시범 지역, 협력 학교 및 대학교를 지정하고, 가치 기반 교육 모니터링 단위(Monitoring Units)를 설립할 것입니다.
 - **2029년 시범 운영 시행** : 다양한 경제 및 문화적 배경을 대표하는 15개 회원국에서 시범 프로그램 착수. 시범 운영은 교육과정 효과성, 평가 도구 및 교사 훈련 성과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중간 평가와 국가 간 가상 협의를 통해 모범 사례와 개선 영역을 파악할 것입니다.
 - **2030년 글로벌 확산 및 모니터링** :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 2030) 의제 하에 전 세계 국가 교육과정에 VBE를 전면 통합합니다. 유네스코와 OECD는 연례 글로벌 진행 보고서를 조정하고, 국제적인 동료 학습 회의를 촉진하며, 청년들의 시민 참여, 윤리적 추론 및 상호 문화 역량과 같은 영향 지표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 각 참여국은 핵심 과목 전반에 걸쳐 가치 기반의 학생 주도 학습 모듈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는 암기식 시험이 아닌 구조화된 교실 토론, 논쟁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 상호 문화 이해, 윤리적 의사 결정 및 사회적 책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진행 상황은 동료 평가, 성찰 일지(reflective journals) 및 교사 관찰 기록을 통해 문서화되며, 이 모듈에서는 전통적인 표준화된 평가를 대체할 것입니다. 국가 교육청은 유네스코(UNESCO)와 OECD의 훈련을 받아 이행 허브 역할을 하고 연간 진행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 **목표** :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윤리적, 사회적 역량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교육을 암기식 학습에서 성찰적 참여로 전환하여, 독립적인 추론, 공감 및 시민 행동이 가능한 세대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강사 훈련** : 대화 촉진, 윤리적 추론 및 상호 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중점을 둔 의무적인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시작합니다.
 - 훈련 모듈은 유네스코 인증 가치 기반 교육(VBE) 프로그램 하에 표준화되며, 대면 및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 교육자들은 가치 기반 학습의 글로벌 촉진자(Global Facilitators of Value-Based Learning)로 인증을 받아 일관된 글로벌 교육 품질을 보장합니다.
- **학습 방법론** : 사회 과학, 인문학 및 시민 교육의 핵심 교육과정에 문제 기반 학습(PBL) 및 질문 기반 학습(QBL) 방법론을 통합합니다.
 - 각 학생 집단은 환경 윤리, 디지털 시민권 또는 인권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학년당 최소 두 가지의 학제 간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 평가는 암기식 성과보다는 성찰, 협업 및 증거 기반 추론을 강조할 것입니다.
- **글로벌 대화 및 협력** : 유네스코의 글로벌 시민 교육(GCED) 플랫폼이 조정하는 학교 간 및 국가 간 가상 토론을 장려하여 글로벌 청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 토론은 평화와 인권, 지속 가능성, 디지털 윤리, 시민 책임 등 순환하는 글로벌 주제로 분기별로 개최될 것입니다.
- 학생 리더와 청년 위원회는 정책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와 국제 청년 포럼에 기여하여 윤리적 리더십과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할 것입니다.

○ 모니터링 및 평가 :

- 각 국가는 교육부 산하에 국가 가치 기반 교육 모니터링 단위(National Value-Based Education Monitoring Unit)를 설립하여 교사 훈련, 교실 참여 및 학생 참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 유네스코와 OECD는 격년으로 검토를 수행하여 이행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글로벌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 성과 지표: 2030년까지 윤리적 또는 시민적 문제에 대한 교실 토론에 주간 참여를 보고하는 학생의 비율을 전 세계적으로 50%로 늘립니다 (국제 설문조사 데이터 기반).

- 각 참여 학생은 프로그램 동안 참여 및 성찰을 측정하는 20~30개의 동료 평가를 완료할 것입니다.
- 시범 단계 전후에 비판적 추론 역량 테스트(Critical Reasoning Competency Tests)를 시행하고, 평균 15점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지표 (INDICATORS)

- 유럽 평의회 민주 문화 역량 참조 프레임워크(Council of Europe's Reference Framework of Competences for Democratic Culture)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의 시민적 및 윤리적 성장을 세 가지 숙련도 수준(초급-중급-고급)으로 평가합니다.
- OECD 교육 2030 학습 프레임워크(OECD's Education 2030 Learning Framework)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긴장 및 딜레마 해소,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 등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평가합니다.
- 유네스코 글로벌 시민 교육(GCED) 지표가 국가 수준에서 시민 참여 및 상호 문화 역량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평가 (EVALUATION)

- 의사소통 명확성, 공감 및 건설적인 갈등 해결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표(rubrics)를 사용하여 매월 동료 평가 및 교사 관찰이 수행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연구를 위한 지역적 또는 세계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고, 학생 주도 발표 또는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증거 기반 해결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 평가는 시험 성과보다는 비판적 깊이, 공감, 명확성 및 시민적 책임감을 강조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결과 (EXPECTED OUTCOMES)

- 전 세계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및 대화 중심의 교수법을 채택합니다.
- 학생들이 윤리적 인식,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및 공감 능력을 개발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집니다.
- 교육 시스템이 학문적 엄격함과 도덕적/시민적 역량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발전합니다.
- 평화, 지속 가능성 및 공평성을 위한 협력 행동 가능한 글로벌 인식을 갖춘 청년 리더 세대 등장.

5. 글로벌 보건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권고

모든 회원국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보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는 국가 보건 전략 설계에 대한 구조화된 공공 협의 및 학생 참여 통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행 증거 : 2028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포괄적인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및 학생이 제출한 권고 사항을 매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청년 및 시민 사회 투입이 최소 30% 증가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행 측정 : WHO가 검증한 지표(연간 개최된 참여 협의 보고 건수 및 제안의 문서화된 채택률 포함)로 진행 상황을 측정하며, 공평하고 글로벌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수준 모두에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제 3조 : 행동 촉구

· 3.1 환경 지속 가능성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그에 포함된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그리고 전 세계가 비준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이미 명시된 **근본적 약속을 유지한다**. 본 조문은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의 권고와 연결해 전 세계적 환경 관리에서 야심을 높이고 이행 격차를 해소하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고 구조적인 행동 촉구를 제시한다.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게

1. 기후재원 동원 및 추적에 관한 사항(NCQG 이행)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새로운 집단적 정량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행위 주체가 연간 1조 3천억 달러를 마련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이 성과는 시급히 더 발전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적응 자원 격차는 연간 1,870억~3,59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단지 약 5퍼센트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응적이고 점진적인 자원 구조에서 벗어나 예측적이고 전략적이며 변혁적 성격의 적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음 조치가 필수적이다.

회원국에 촉구한다. 기초적인 NCQG 합의 수준을 즉시 넘어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집행하며 추적하기 위한 책임기반·수요기반 메커니즘을 가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자원 흐름을 추적해 자원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며, 국제 기후재원의 기준과 책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에 대응해야 한다.

선진국 당사국과 국제금융기구(IFIs)에 촉구한다. 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식의 신규 지원, 추가 지원, 무상지원 및 고도 양허성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이 개발도상국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야심 있는 기후행동과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UNFCCC 산하 보조기구, 파리협정 크레딩 메커니즘 감독기구, 집행기관에 지시한다. 예측적이고 전략적이며 변혁적 적응 방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NCQG 보편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현재 적응 투자의 주류를 이루는 대응적·점진적·개별 프로젝트 기반 자원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2. 국가 기후목표와 거버넌스 강화(NDC 3.0 및 FPIC)

COP28 결정에서 화석연료 감축 전환이 명확히 요구되었음에도, 많은 선진국 당사국은 현행 국가결정기여(NDC 3.0) 이행 과정에서 여전히 목표와 실행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보조금 유지나 확대,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의 부재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모든 기후 프로젝트, 특히 감축 목표와 자원 동원을 포함하는 사업의 효과성과 정당성은 반드시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크레딩 메커니즘에 통합된 의무적 안전장치와 엄격히 일치해야 하며,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승인 조건으로 간주된다.

모든 회원국에 촉구한다. 현행 국가결정기여(NDC 3.0)가 첫 번째 글로벌 스톡테이크(GST)의 결과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를 비롯한 정부 간 기구의 기술지원을 활용해 환경 법집행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제도적 자원을 충분히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역량, 거버넌스 조정, 기술 평가 관련 지속적인 역량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3. 기후교육 및 시민 참여의 통합

기후교육과 환경문해력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UNESCO가 주도하는 '친환경 교육 파트너십(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은 모든 학습자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적 책임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환경 관리의 출발점은 충분한 정보를 갖춘 시민이며, 세계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 체계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UNESCO에 촉구한다. 친환경 교육 파트너십 체계 안에서 회원국 파일럿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의 현실에 적합하고 실천지향적 기후 교육을 개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 내의 구조적 복잡성과 지역 수준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UN 회원국 전체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및 환경문해력을 국가 교육과정에 제도화하도록 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UN 녹색 교육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친환경적 태도와 행동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한다.

4. 공정한 농촌 개발 지원

국제금융기구(IFIs), 개발기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농촌 및 원주민 공동체 개발을 위한 투자가 대응적이고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물 공급, 주거, 연결성(connectivity) 등 구조적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격차는 해당 공동체의 경제발전과 환경 관리에 중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에게

1.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 관리자의 역량 강화

국제 기부자, 개발기관, 자선단체에 촉구한다.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Indigenous Peoples & Local Communities, IPs & LCs)에 대한 심각한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약속을 이행하고, 이들이 기후·보전 자원 흐름에 비례적이며 직접적인 접근권과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이고 확장 가능한 사회·환경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이자, 효과성과 정의 모두에 관한 문제다.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기업 파트너에게 촉구한다. 환경 프로젝트에서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잡한 금융 구조, 법적 장벽, 관습적 토지권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자원 접근을 가로막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2. 지역 기반·포용적 순환경제 모델 확대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s)을 조성하며, 소액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투자와 기술 지원을 **촉구한다**. 이는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고 수입품 의존도를 줄이며 지속가능한 농촌 생계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방정부, 사회적기업, 개발기관에 촉구한다. 비공식 경제 영역(예: 폐기물 수거인, 소규모 재활용 업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확대된 순환경제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역량, 자원,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분절된 민간 부문 구조와 기득권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환경기금(GEF) 소규모보조금프로그램(SGP, UNDP 운영기관)에 지시한다. 전략적 프로젝트의 현행 최대 지원한도인 15만 달러를 상향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성공적 사례가 중요한 육상·해양 생태권역 전반으로 실제로 확장·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적 응계획(NAPs)과 국가결정기여(NDCs)와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

3. 지역 공동체 회복력 및 기후 문해력 강화

지방정부, 환경 NGO, 도시계획가에 촉구한다. 지역 녹지공간 확대, 나무 심기, 서식지 복원, 접근 가능한 공원 조성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도시 열섬 완화에 필수적이며 주민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

지역 농민단체, 연구기관, 기술 파트너, NGO, 국제개발기관에 촉구한다. 혁신적 관개 기술과 재이용 시스템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도입해 물 보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 사례를 참고해 효율적 관개, 빗물 저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식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물 안보를 높이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변동성에 공동체가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 단체, 문화 협회, 사회복지 제공기관에 촉구한다. 기후로 인해 이주를 겪은 이주민이 존엄하게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문화 간 대화, 언어 접근 프로그램, 포용적 지역 행사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유발 이주 상황에서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게

1.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배출 보고

민간 부문은 환경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여러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Scope 3) 배출 보고의 현저한 지연이 큰 문제로 나타난다. 현재 민간 기업의 29퍼센트만이 일부 Scope 3 배출을 보고하는 반면, Scope 1과 2 배출은 88퍼센트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은 기업의 직접 운영에서 발생하는 Scope 1·2 배출보다 평균 26배 높아,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의 투명성, 목표 설정, 탈탄소화 노력에 중대한 누적 격차를 초래한다.

모든 주요 상장기업 및 연 매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민간 기업(예: 미국 상장 500대 기업)에 촉구한다.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도록 Scope 3(공급망) 배출에 대한 의무적이며 완전 감사된

보고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환경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UN 글로벌 콤팩트에 촉구한다. 기업이 감사된 탄소 공시 데이터와 생물다양성 영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통합 포털을 즉시 개발하고 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집계된 정보는 SDGs에 대한 국가 자발적 국가검토(VNRs)에 연계되도록 하여 개별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스템 차원의 감독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규제기관과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TCFD) 권고 등 글로벌 보고체계 참여를 고오염 배출 부문에 대해 의무화하여, 강력한 Scope 3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명확한 지표와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금융 재배분 및 노동 전환

기업 경영진과 기관 투자자에게 촉구한다. 탄소집약적 프로세스에서 재원을 신속히 재배분해 재생에너지 개발, 기후 기술 연구개발,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투자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

화석연료 및 고배출 기업에 권고한다. 기존 노동자가 녹색경제·블루경제 분야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역량 강화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3. 순환경제와 통합적 그린 인프라 촉진

건설 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고오염 산업에 촉구한다. 노후화되었거나 폐기된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자재를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실천에 자본을 투입하고, 국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 건물과 지속가능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주요 국제 그린빌딩 인증체계(예: BREEAM, LEED)에 포괄적 사회 지속가능성 기준을 반드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 및 인권 보호, 지역사회에 남는 자산(community legacy) 계획, 이용자의 웰빙을 평가·검증하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축가, 도시계획가, 사회과학자, 공중보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에게

1. 실질적 공동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청년들이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제도 구조, 공식 정치 절차, 책무성 체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참여는 단순 자문이나 옹호를 넘어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회원국과 다자기구에 촉구한다. 청년 참여를 기존의 옹호·자문 역할에서 벗어나 정식 공동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여 제도적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기후 거버넌스의 모든 수준에서 정책 수립, 계획,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직접적이고 맞춤형 자원 확보

교육기관과 청년 네트워크에 촉구한다. 실습 기반 훈련, 녹색 기술 개발 등 청년의 환경 지속가능성 참여를 강화하는 기존 참여 메커니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청년 의회, 청년 대사, 지역 기반 프로젝트 등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형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청년 인플루언서, 예술가, 콘텐츠 제작자, 교육기관, 미디어 기관, 그리고 UNFCCC 청년그룹(YOUNGO)을 포함한 글로벌 청년 연합체에 촉구한다. 대중문화와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해 기후 인식과 친환경 행동을 확산해야 한다. 창의적 스토리텔링, 소셜미디어 옹호 활동, 음악·영화·스포츠 등 미디어 콘텐츠에 지속가능성 주제를 통합해 환경 인식을 높이고 폭넓은 행동 변화를 촉발해야 한다.

3. 청년 주도의 기후이주 지원 및 옹호

청년 주도 국제·지역 네트워크에 촉구한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청년 네트워크에 지시한다. 인도적 비자, 임시 보호 지위, 지역 차원의 자유 이동 협정과 같은 기존의 구체적 이주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옹호하는 데 그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하고 공식적인 보호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3.2 경제 전환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 대하여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에서, 확대되는 불평등과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교육과 접근 가능한 실제 노동 기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글로벌·국가·지역 차원의 기관들은 청년을 역량 강화하고, 책무성을 높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포용적 경제 시스템을 조성할 공동 책임을 가진다. 보다 공정한 세계 경제를 향해 체계적이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이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은 우리의 권고사항이다.

1. 각국 교육부

- 교육부는 SDG 4(양질의 교육)에 부합하도록 모든 교육 단계(초등·중등·고등)에서 의무 금융교육을 통합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산 수립, 창업, 디지털 금융에 관한 실용적 학습 모듈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은 약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농촌 및 소외 지역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2. 각국 정부

- 정부는 교육부뿐 아니라 재무부·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체계를 고용 기회와 연계해야 한다. 이는 금융문해력을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생계 능력으로 연결해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협력은 1~2년 내 시작하고, 완전한 연계 프로그램은 3~5년 내 운영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3. UNESCO

- UNESCO는 민간 기업, 협동조합, NG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교사 교육 및 청년 멘토십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세계 금융문해력의 진전을 비교하는 격년(Global Financial Literacy Report) 보고서를 발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세계 포용적 교육 시스템을 촉진해야 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2년 내 발간하고 이후 2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4. UNDP

- UNDP는 IMF 및 국제감사기구(IAB)와 협력해 재정 투명성 기준을 국가 SDG 보고 및 거버넌스 지표에 통합해야 한다. 이 체계는 3~5년 내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하며, 지역 우선순위와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개발은행(세계은행, IMF, IDB, AIIB)

- 개발은행은 청년 대상 금융 수단을 확대하고, 혁신기금·마이크로크레딧·기술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수단은 청년 대표와 지역 금융기관이 함께 공동 설계해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2~4년에 걸쳐 단계적 도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 개발은행은 대출, 지원, 부채 경감 조치를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파트너십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업이 책임성을 갖추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필요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 개혁은 1~2년 내 시작하고, 5년

내 전면 시행해야 하며, 해당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포함해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사회 및 지역 공동체에게

시민사회와 지역 기반 행위자들은 정책 설계와 실제 현장 효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필수적이다. NGO, 협동조합, 풀뿌리 조직은 금융포용, 투명성, 공정한 발전을 원칙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들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제도적 책무성 감시, 지역 협력 촉진을 통해 회복력 있고 참여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1.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단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과 협력해 포용적이고 담보 요구가 낮은 대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이 모델은 모바일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해 청년, 여성, 취약계층이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1~2년 내 착수, 3~5년 내 완전 시행 및 접근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NGO는 국제감사기구(IAB)와 개발은행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금융 메커니즘을 시민사회 새도우 리포트와 참여형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 체계는 1년 내 구축, 투명성·책무성·영향 평가를 위한 연례 보고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체는 정책 결정, 경제 대화, 지역 개발 이니셔티브에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협동조합 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협의회는 2년 내 구성, 2~3년마다 정기적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적절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
- 협동조합 연합체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각국 협동조합 연합체가 조정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국가 간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2~3년 내 개발, 지역 우선순위·혁신·진전을 반영해 3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자 단체

-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는 변화하는 디지털·그린 경제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노동환경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역량 강화가 공정한 노동기준과 소득 형평성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금융교육과 사회보장 옹호 활동을 단체교섭 체계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2년 내 시작하고, 2030년까지 노동조합 교육 의제 및 국가 노동전략에서 측정 가능한 진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에게

1. 포용적 경제 미래를 위한 청년 목소리 결집

- 전 세계 청년 주도 조직은 지역 간 협력하고, 지역 현실을 글로벌 정책과 연결하며,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조치는 청년운동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를 설계하는 데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2. 글로벌 청년 경제 연합(G-YEA) 설립

- 모든 지역의 청년 조직이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설계하고 윤리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 연합은 2026년까지 출범하고, 2030년까지 지역 간 청년 기업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또래 간 역량 강화(Peer-to-Peer) 이니셔티브

- 청년 트레이너를 동원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기후 금융, 창업을 교육하는 또래 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 노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전 세계 200만 명의 청년을 교육하며, 이 중 최소 50%는 여성 및 취약계층이 참여해야 한다.

4.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 G20, COP, UN ECOSOC 등 글로벌 경제 정책 플랫폼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포용적이고 청년 중심의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030년까지 청년 주도 권고안이 최소 10개의 국제 선언문에 반영되어, 글로벌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게

민간 부문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혁신의 주체이자 금융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로서, 책임성·포용성·장기적 사회적 영향에 앞장서야 한다. 금융기관이든 사회적 책임 기업이든, 기업은 이윤 중심 모델을 넘어 투명한 경영, 공정한 고용, 포용적 금융접근을 통해 공유 번영에 투자해야 한다.

1. 민간 은행 부문

- 민간 은행 부문은 개발은행과 협력해 청년 창업과 녹색 혁신을 위한 양허적 금융(concessional financing)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제감사기구(IAB)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기준과 투명한 보고를 도입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불법 금융 흐름을 방지해야 한다. 이행은 2025년 시작,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 민간 은행은 지역 기관 및 NGO와 협력해 청년 창업가 및 첫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십 연계 금융문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역량 강화, 접근 가능한 마이크로대출, 여성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을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2025년 시작, 2030년까지 확장 및 평가가 지속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책임을 가진 민간 부문

민간 부문은 글로벌 감사 원칙에 부합하는 개방적 재정 투명성 및 ESG 투명성 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IMF-UN과 함께하는 공공-민간 재정 대화에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 지표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실행을 시작해 2030년까지 완전 통합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과 기관은 공정한 임금, 안전, 접근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와 노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견습제도, 유급 인턴십, 초기 경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5년 시작, 2030년까지 확대 및 평가 완료를 목표로 해야 한다.

3.3 사회정의와 평등

우리는 전 세계의 청년으로서, 정의·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모든 글로벌 행위자에게 용기·일관성·책무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덕적 위기, 심화되는 불평등, 환경 파괴, 민주주의 약화, 디지털 배제는 결정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은 점진적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구조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요구는 연대와 근거, 그리고 더 공정한 세계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부문·청년 네트워크 간의 진정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본 문서의 모든 권고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아젠다와 일치하며, 특히 SDG 3(건강), SDG 4(교육), SDG 5(성평등), SDG 10(불평등 감소), SDG 13(기후 행동), SDG 16(평화·정의·제도 강화)을 반영한다.

우리는 사회정의가 경제를 이끄는 미래, 교육이 지성과 함께 연민을 기르는 미래, 그리고 진전이 이윤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존엄과 기회로 측정되는 미래를 그린다.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게

사회정의와 평등은 포용적이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이다. 우리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협력하여 경제적 공정성, 책임 있는 거버넌스, 디지털·정보 접근의 형평성, 양질의 교육, 기후 정의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글로벌 기관은 성별·연령·배경·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SDGs와 같은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들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사회·환경적 도전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더 공정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1. 포용적 거버넌스와 책무성

정부와 국제기구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설계할 최고 수준의 책임을 지닌다. 2028년까지 모든 회원국은 각 부처·시민사회·청년 대표로 구성된 국가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교육 접근성, 보건의료 포용성, 소득 형평성 등을 포함한 측정 가능한 형평성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매년 보고하며 유엔의 지원 아래 독립적 감독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는 국가 투명성·형평성 보고서(National Transparency and Equity Report)를 발간해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오픈데이터·참여감사(Participation Audits)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한 거버넌스, 정기적 반부패 점검, 시민과의 정기적 소통 메커니즘을 약속해야 한다. 지역기구와 국제기구는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책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포용적 거버넌스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정부와 다자기구는 시민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반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유엔과 지역 인권기구는 언론인, 활동가, 평화적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시민사회 모니터단이 검증하는 연례 글로벌

표현의 자유 평가는 각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 각 정부는 매년 표현의 자유 준수 현황과 침해 감소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제재 및 법적 구제를 포함한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3. 교육과 인권

교육은 인류가 가진 정의와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2029년까지 모든 국가는 인권, 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기후 교육, 시민 책임을 전 교육 단계의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성인 학습과 비형식 교육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연령대와 소외된 공동체를 포함해야 한다. 매년 교육 예산의 5~10%는 대표성이 낮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과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도덕적 차원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학습자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 되는 존엄, 평등, 책임의 원칙을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인권 교육이 부재할 경우, 청년은 자신이 가진 보호 장치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하게 된다. UNESCO와 유엔 고위정치포럼(HLPF)은 2년마다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포용성·문해력·교육과정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는 성평등 관련 진전을 매년 검토해야 한다.

3.1 양질의 학습환경과 교육 인프라

양질의 교육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국가는 위치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과 학습자가 안전하고,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가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최소한의 인프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충분한 교실 공간, 위생시설, 전기, 깨끗한 물, 디지털 연결성이 포함된다. 교사 훈련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공정한 임금, 전문성 개발, 충분한 교육 자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 예산은 농촌 및 저소득 지역 학교 개선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해 정책과 실제 교육 환경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UNESCO, UNICEF,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러한 약속을 모니터링하고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어떤 학습자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성평등과 제도 개혁

구조적 평등은 제도적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6년까지 모든 국가는 UN Wome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국가 성평등·포용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한다. 이 태스크포스는 2년마다 성평등 감사를 실시하고, 임금 형평성을 모니터링하며, 거버넌스의 모든 수준에서 대표성을 평가해야 한다.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은 구속력 있는 동일임금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리더십 균형(leadership parity) 체계를 제정해야 한다. 진전 상황은 고위정치포럼(HLPF)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제출되는 2년 주기의 성평등 성과표(Gender Equality Scorecards)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5. 디지털 포용과 윤리적 혁신

디지털 형평성은 이제 시민권을 규정하는 핵심 조건이 되었다. 2028년까지 모든 회원국은 최소 95퍼센트의 인구가 저렴하고 안전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디지털 포용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는 UNESC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해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에 관한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각 국가는 매년 디지털 형평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유엔은 AI 윤리와 지속가능 기술 관행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글로벌 관측소를 유지해야 한다.

6. 기후재원과 청년 포용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결정적 정의 의제이다.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체계를 기반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2027년까지 기존 약속을 이행하고 확대해야 하며, 전체 기후 재원의 최소 10퍼센트를 청년 주도 이니셔티브에 배정해야 한다. 이는 2019~2021년 동안 청년 단체가 글로벌 기후 완화 분야 자선기금의 단 0.76퍼센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Youth Climate Justice Study(ClimateWorks Foundation, 2022)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파리협정과 일치하는 탄소 감축 법제화를 추진하고, 기후 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하며, 적응 재원에 관한 투명한 공공 보고를 보장해야 한다.

7. 건강 형평성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정의로운 사회는 양질의 의료 접근을 특권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는 산모·아동 건강, 정신건강, 예방의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저렴하고 형평적이며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투자는 1차 보건의료 강화, 농촌 및 지역사회 진료소 확대, 숙련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집중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민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지역 보건기구와의 협력은 SDG 3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존엄하고 안전하며 충분한 자원이 확보된 시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에게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 조직은 평등을 증진하고 소외된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인종·민족 소수자, 여성, 종교집단, LGBTQ+ 구성원, 장애인, 농촌 주민, 이주민 및 난민 등 취약계층). 우리는 이 단체들이 특히 지원이 부족한 공동체 내에서 포용, 대표성,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 풀뿌리 옹호 활동, 지역 리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사회는 정책과 실제 경험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대표되며 지원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포용적 대표성과 시민 참여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양심이다. 그 목적은 시민과 제도 간의 사회적 계약을 지키는 데 있다. 2026년까지 시민사회단체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UNDP, UNICEF, UNESCO, UNHCR, 국제장애인연맹과 협력해 2025~2026년 사이 최소 20개 시범 공동체에서 포용적 접근 허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센터들은 다국어 통역, 디지털 접근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30년까지 모든 지역 프로그램의 90퍼센트가 포용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연례 접근성 감사와 투명성 보고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2. 시민 연합과 참여적 거버넌스

CIVICUS,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N Women, 유엔 민주주의기금, 각국 의회가 이끄는 시민사회 연합은 표현의 자유, 동등한 참여, 시민적 책무성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문 플랫폼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 연합은 소외계층에게 리더십과 옹호 활동을 교육하고, 2028년까지 시민사회 옵서버가 국가 개발 및 SDG 모니터링 체계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2030년까지 지역 내 모든 의사결정 구조의 최소 절반은 여성과 소외계층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OHCHR은 연례 대표성 지수를 공표해야 한다.

3. 문화 보존과 사회적 연대

세계적 이주와 기술 변화의 시대에 공동체는 상호 이해를 키우면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집단을 위한 문화 허브는 소속감과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전통을 기록·공유하는 문화동아리, 기록보관소, 교육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는 지역 및 국가 모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문화·민족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문화적 지식이 포용적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4. 지역 책무성과 평화 구축

시민사회단체는 투명성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지역 NGO는 갈등을 중재하고, 허위정보를 대응하며,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나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내부 자원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공인 NGO는 젊은 활동가와 풀뿌리 운동이 UNFCCC를 포함한 국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UN 접근 자격을 재분배해야 한다.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에게

청년은 진전과 변혁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청년 네트워크와 학생 단체가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동등한 기회를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을 요청한다.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의사결정 공간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리더들은 협력·연대·책무성에 기반한 더욱 포용적 글로벌 의제를 형성할 수 있다.

1. 협력과 리더십

청년 네트워크는 변혁의 촉매이다. 2026년까지 최소 50개 지역 연합으로 구성된 글로벌 연맹이 가동되어 교육, 지속가능성, 디지털 포용, 형평성을 아우르는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분기별 디지털 총회를 개최해 청년 단체들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연대를 구축하며, 국경 간 옹호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농촌지역, 분쟁 영향 지역, 대표성이 낮은 지역의 참여를 우선해 진정한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2. 연대와 국경 간 협력

청년 네트워크는 활동가, NGO, 학생을 연결하는 ‘또래 간 연대 허브(Peer-to-Peer Solidarity Hubs)’를 구축해야 한다. 이 허브는 기후 정의, 성평등, 사회적 포용에 관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를 글로벌 흐름으로 확장해야 한다. 캠페인은 다국어 스토리텔링과 교차적 대표성(intersectional representation)에 기반해야 하며,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세계 담론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3. 교육, 역량강화, 정책 대화

청년은 자문 단계를 넘어 공동 설계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2027년까지 정부, 대학, UN 국가사무소는 청년 대표가 정책을 공동 작성하고 SDG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대화 및 책무성 플랫폼'을 제도화해야 한다. 청년 참여는 공식적 정책 효력을 가져야 하며, 연례 보고서는 각국 의회와 유엔에 제출되어야 한다.

4. 포용적 멘토십과 리더십 개발

청년 리더십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2030년까지 청년 네트워크는 여성, 난민, 장애인, LGBTQ+ 청년을 위한 멘토십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율, 리더십 성장, 지역사회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동 지원해 포용성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실제 운영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혁신과 책무성

청년 주도 조직은 지속가능성, 교육, 기술 분야에서 측정 가능한 지역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모든 이니셔티브에는 명확한 영향 지표와 공공 보고체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식 교류, 멘토십, 연구 확산은 지역 전반에 제도화되어 집단적 진전을 가속해야 한다.

6. 인권 연대와 글로벌 옹호

청년은 보편적 인권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 글로벌 청년 연합은 분쟁 영향 지역 공동체와 연대하고, 인도적 보호·정의·책무성을 옹호해야 한다. 이러한 옹호 활동은 비당파적이어야 하며, 근거 기반 접근을 유지하고, 세계인권선언에 확고히 기반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게

민간 부문은 사회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 기업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 관행을 채택해 공정한 고용, 동등한 기회,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을 경제적 성과와 동등하게 우선순위에 두는 기업은 번영이 공유되고 인권이 존중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신흥 기업 모두는 전통적인 이윤 중심 모델을 넘어 사람 중심의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1.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

민간 부문은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경제를 형성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기업은 형평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전략 계획에 통합해야 한다. 기업은 임금 형평성과 공정한 채용을 보장해야 한다. 중견 및 대기업의 최소 5퍼센트의 일자리는 장애인 또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는 개인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연례 다양성·포용성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2. 사회적 대화와 공동 책임

경제 성장은 사회적 진전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 기업은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영향 전략을

공동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UN 글로벌콤팩트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 제3자 평가를 통해 매년 검토되어야 한다. 성평등, 직장 안전, 공정 임금에 관한 투명한 보고는 모든 기업이 매년 이행해야 하는 요구사항이다.

3. 책임 있는 혁신과 윤리적 기술

기술은 착취가 아니라 형평성을 증진해야 한다. 민간 부문은 청년 주도 단체와 협력하여 포용성, 지식 공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윤리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피해에 대한 책임성과 콘텐츠 소유권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독립적 디지털 윤리 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UNESCO와 ITU에 보고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평화, 기업의 책임

기업은 평화가 번영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CSR 기금의 일정 비율을 가자,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분쟁 영향 지역의 교육·생계 창출·평화 구축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각 기업은 청년 교육 및 견습 프로그램에 급여 총액의 최소 1퍼센트를 배정하고 고용 성과에 대한 투명한 문서화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검증된 넷제로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진척 상황을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개해야 한다.

5. 집단적 영향과 다부문 파트너십

민간 부문은 변화를 위한 진정한 파트너로 행동해야 한다. 정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범부문 협력을 제도화하여 혁신 허브, 연구센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공공 재원과 1:1 매칭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제공된 기술, 창출된 일자리, 달성된 환경 성과를 기록하는 오픈 액세스 영향 대시보드를 유지해야 한다.

3.4 기술혁신과 윤리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게

1.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집행

- 누가(WHO) : 유엔, 유네스코, 각국 정부, ASEAN·아프리카연합·EU 등 지역기구
- 무엇을(WHAT) : 인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적 혁신을 보장하는 국제·지역 AI 거버넌스 표준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 국제·국가·지역 차원의 AI 검토 및 규제위원회 설치, 대표성이 낮은 집단의 참여 보장
- AI 기술의 현재 사용이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과 부합하도록 보장하며, 특히 전쟁·감시 분야에서 기술 사용 증가에 대응
- AI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정부 기술 개발 예산의 최소 1%를 청년 주도 AI 사업에 배정
- 언제까지(WHEN) : 2035년까지 이 체계를 개발·채택하고, 이후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정기 검토
- 성공 판단 기준(HOW) :
 - AI 거버넌스 정책을 채택한 회원국 수
 - 윤리위원회 내 성별·지역·소수자 대표성 지표
 - AI·기술의 준수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한 격년 공개 보고서 발간

2. 윤리적 기술 협력의 글로벌·지역 강화

- 누가(WHO) : 세계은행, OECD, UNDP, 각국 정부, 민간 부문 리더
- 무엇을(WHAT) : 윤리적 기술혁신 및 책임 있는 AI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고 시행한다. 또한 정부·청년 네트워크·시민사회·민간 산업이 참여하는 연례 글로벌 기술 윤리 포럼을 설립해 국제적 논의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 언제까지(WHEN) : 자원 조달체계 및 대화 구조는 2030년까지 마련하고, 첫 글로벌 포럼은 2032년 개최
- 성공 판단 기준(HOW) :
 -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 예산, 지원된 프로그램 및 국제 AI 프로젝트 수
 - 참여 국가 및 기관 수
 - 포럼과 대화를 통해 형성된 정책 권고 및 파트너십의 구체적 성과

3. 윤리적 AI 테스트를 위한 국제 기술 샌드박스 구축

- 누가(WHO) : EU, ASEAN, 아프리카연합 등 지역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각국 기술부, 민간 기술기업
- 무엇을(WHAT) : 국경을 넘는 시범사업(기술 샌드박스)을 개발하여 윤리적 AI 실천,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포용적 인터넷 접근 솔루션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교류하도록 한다. 특히 대표성이 낮은 지역과 청년 등 소외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언제까지(WHEN) : 2035년까지 최소 3개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
- 성공 판단 기준(HOW) :
 - 협력 시범사업 수와 참여 국가 수

-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유된 문서화된 모범사례 수
- 디지털 포용 지표 개선(특히 청년 및 대표성 낮은 지역 중심)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에게

1. 디지털 포용과 데이터 시민권 촉진

- 누가(WHO) : 인터넷사회재단(Internet Society Foundation), 글로벌 디지털 포용 파트너십(Global Digital Inclusion Partnership), 아프리카 디지털 권리 허브(Africa Digital Rights Hub) 등 기술 중심 시민사회 단체
- 무엇을(WHAT) : 농촌지역 및 대표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소외·평등참여 부족 집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및 데이터 시민권 교육을 제공
- 언제까지(WHEN) : 2030년까지 지역별 시범사업 출범, 2040년까지 확대
- 성공 판단 기준(HOW) :
 - 지역 기반 디지털 학습센터 설치 수, 무료 디지털 시민권 워크숍 제공 횟수, 양성된 지역 퍼실리테이터 수
 - 대표성 낮은 집단의 데이터 시민권 지표 개선

2. AI 윤리·오정보/허위정보·디지털 웰빙 인식 캠페인

- 누가(WHO) : 액세스 나우(Access Now), 히보스(Hivos), 아시아센터(Asia Centre), 아티클 19(Article 19) 등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국내 단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AI 연구원(AI Asia Pacific Institute), 글로벌에틱스(Globethics) 등 윤리적 AI·기술 사용을 중점으로 하는 단체
- 무엇을(WHAT) : 책임 있는 AI 사용, 오정보·허위정보 식별, 온라인 안전에 관한 공공 인식 캠페인을 추진한다.
- 언제까지(WHEN) : 2026년까지 캠페인 방식 설계 및 출범 준비를 완료한다.
- 성공 판단 기준(HOW) :
 - 다국어·접근성 강화된 디지털 시민권 인식 캠페인·워크숍·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수
 - 책임 있는 AI 사용, 오정보·허위정보 식별, 온라인 안전 관련 공공 인식 지표 개선

3. 윤리적 감독 및 공동 설계 과정 참여

- 누가(WHO) : 글로벌 파트너스 디지털(Global Partners Digital),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협회(APC), 시페사(CIPESA) 등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국내 단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AI 연구원(AI Asia Pacific Institute), 글로벌에틱스(Globethics) 등 윤리적 AI·기술 사용을 중점으로 하는 단체
- 무엇을(WHAT) : AI 및 데이터 관련 사업의 감독·책임성 메커니즘을 공동 설계하고 참여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 설계 과정, 자문위원회, 정책 협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 언제까지(WHEN) : 2030년 말까지 표준화된 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통합·정착
- 성공 판단 기준(HOW) :
 - 윤리적 감독 및 공동 설계 과정에 참여한 지역 구성원 수
 - 기술 윤리에 대한 참여도 및 인식 지표 증가

4. 지역 혁신 허브 촉진

- 누가(WHO) : 월드 와이드 웹 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 지역 시민사회단체(CSO)
- 무엇을(WHAT) : 지역 전통지식·원주민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지역 혁신 허브를 설립한다.
- 언제까지(WHEN) : 2030년 초까지 최소 5개 지역에서 시범 허브 운영
- 성공 판단 기준(HOW) :
 - 제공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지표
 - 지역 혁신가에게 제공된 재정 지원 규모
 - 설립된 지역 혁신 허브 수
 - 전통지식·원주민 지식에 대한 인식 지표 증가

5.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접근성 강화

- 누가(WHO) : 그린피스(Greenpeace) 등 환경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국제 단체, 그리고 윤리적 AI 사용을 중점으로 하는 글로벌에틱스(Globethics)
- 무엇을(WHAT) : 디지털 센터의 청정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경 영향을 관리하며,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을 촉진한다.
- 언제까지(WHEN) : 2030년부터 실행을 시작하고, 2040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SDG 7 목표와 연계)
- 성공 판단 기준(HOW) :
 - 태양광 기반 기술 허브 구축, 에너지 인프라 확장, 지속가능 기술 워크숍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수
 - AI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

민간 부문에게

1. 개방형 혁신과 언어 형평성 촉진

- 누가(WHO) : 스타트업, 대형 기술기업(삼성, 구글, IBM, 오픈AI 등), AI 연구소, 대학, 협동조합,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기관들
- 무엇을(WHAT) : 언어 다양성과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고 기술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다언어 데이터셋과 AI 도구를 개발·지원한다. 특히 대표성이 낮은 언어와 원주민·전통 언어를 AI 학습의 우선순위로 한다.
- 언제까지(WHEN) :
 - 2030년 :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해 '다언어 말뭉치 프로젝트(Multilingual Corpus Project)' 시범사업 시작
 - 2031년 : 지역 언어 다양성을 반영한 확장 추진 및 오픈소스 데이터셋 공개
 - 2032년 : 전 세계 교육체계 및 AI 모델에 통합·접근 가능하도록 확대
- 성공 판단 기준(HOW) :
 - 저자원 언어(low-resource language)를 위한 대규모 공공 데이터셋 공개
 - 원주민·소수언어 기반 디지털 콘텐츠 증가
 - 지역 간 기술기업-대학 협력 파트너십 증가

2. 청년 중심 디지털 기술 역량 파트너십 구축

- 누가(WHO) : 기업, 협동조합, 벤처캐피털 펀드, 연구기관, 대학, 기술기업

- 무엇을(WHAT)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청년(15~29세)을 대상으로 데이터과학, AI 윤리, 코딩, 디지털 창업 역량을 교육한다. 특히 지원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한다.
- 언제까지(WHEN) :
 - 2028년 : 모든 지역에서 '청년 디지털 기술 어젠다(Youth Digital Skills Agendas)' 설계
 - 2030년 : 대학·기술센터 기반 교육 허브 개설 및 최소 100만 명의 청년 교육. 여성 40% 참여, 지역별 비율 균형 확보
- 성공 판단 기준(HOW) :
 - 연간 청년 디지털 기술 인증 인원(목표: 2028년 이후 매년 20만 명)
 - 교육 종료 후 6개월 내 고용 또는 창업 비율 50% 달성
 - 여성 참여율 40%, 농촌지역 참여율 20%

3. 윤리적 기술 자기규제 채택 및 이행

- 누가(WHO) : 스타트업, 기술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협동조합, 기업 협회
- 무엇을(WHAT) : 글로벌 기준(EU 인공지능법, 유네스코 AI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기술 자기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편향 완화 기준을 포함해 윤리적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언제까지(WHEN) :
 - 2028년 : 윤리적 AI·기술 사용에 관한 표준화된 자율 윤리강령(voluntary code of ethics) 개발 및 공표
 - 2030년 : 지역 상위 10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 2035년 : 기술 생태계 전반에서 70% 도입률 달성
- 성공 판단 기준(HOW) :
 - 윤리 준수 프레임워크 인증 기업 수
 - 서명기관(signatories)에서 매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수
 - 보고된 윤리·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감소율

4. 지역 AI·환경영향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구축

- 누가(WHO) : 에너지 기업, AI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 무엇을(WHAT) :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센서,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을 결합한 AI 기반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염·에너지 효율·지속가능성 지표를 측정·관리한다.
- 언제까지(WHEN) :
 - 2027년 : 5개 산업 허브에서 연구 및 시범 운영
 - 2028~2035년 : 국가 및 지역 단위로 확대
- 성공 판단 기준(HOW) :
 - 모니터링 지역의 오염도 15% 감소
 - 산업 분야 AI 감사지원 도구(AI auditing tools) 30% 도입
 - AI 데이터를 포함한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5. 사회적·지속가능 기술혁신 장려

- 누가(WHO) : 기업, 스타트업, 벤처펀드, 협동조합
- 무엇을(WHAT) : 교육, 보건, 지속가능성, 정신건강 등 분야에서 긍정적 사회효과를 창출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인증한다. 투자자 및 제품을 대상으로 '윤리적 기술 인증(Ethical Tech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한다.
- 언제까지(WHEN) :
 - 2027년 : 산업협회 및 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인증 프레임워크 출범
 - 2028년 : 벤처투자 실사(due diligence)에 윤리 인증 기준 통합
 - 2028~2032년 : 우선 분야 신규 기술 투자 중 50%까지 확대
- 성공 판단 기준(HOW) :
 - 2030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민간 인센티브 투자가 인증된 '윤리적 기술(Ethical Tech)' 벤처로 유입
 - 벤처캐피털 포트폴리오 중 30%가 해당 프레임워크 인증
 - 사회 지표 개선(교육 접근성, 의료서비스 도달률, 환경보전 성과 등)

전 세계 청소년 네트워크에 대하여

1. 디지털 윤리와 기술혁신 역량 구축

- 누가(WHO) : 글로벌 셰이퍼스(Global Shapers), 청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Youth IGF), 아이섹(AIESEC) 등 전 세계·지역 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유네스코(UNESCO), 유엔개발계획(UNDP), 각국 청년부의 지원
- 무엇을(WHAT) : 청년 리더가 기술창업, 디지털 윤리, 기술혁신 정책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 또래 기반 다언어 검증을 통해 디지털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글로벌 청년 팩트체킹 네트워크(Global Youth Fact-Checking Network)' 구축
- 대학·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멘토십, 시드 펀딩, 온라인 교육 모듈 제공
- 언제까지(WHEN) : 2030년까지 초기 교육 프로그램과 팩트체킹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203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
- 성공 판단 기준(HOW) :
 - 교육받은 청년 리더 수와 참여 국가 수
 - 참여 청년 네트워크 내 허위정보 확산 감소가 검증된 지표
 - 청년 주도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 증가

2.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에서의 청년 참여

- 누가(WHO) : 국제 청년 네트워크, 국가 청년위원회, 유엔·OECD·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자기구와 협력하는 단체
- 무엇을(WHAT) : 국제 및 국가 기술 자문위원회·정책 대화에서 청년 참여 할당제를 요구하며,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와 윤리적 기술 논의에 청년의 발언권을 보장한다.
- 언제까지(WHEN) : 2028년까지 청년 대표성 프레임워크 공식 채택, 2030년까지 참여 할당제 시행

○ 성공 판단 기준(HOW) :

- 기술정책기구 및 AI 윤리위원회 내 청년 구성원 수와 비율
- 공식 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된 청년 주도 정책 제안의 빈도와 질
- 청년 주도 활동의 연례 공표

3. 윤리적 AI 및 디지털 시민권에 관한 글로벌 인식 주도

○ 누가(WHO) : 청년 단체, 디지털 크리에이터, 교육 분야 NGO, 그리고 각국 교육부 및 기술기업과 협력하는 조직

○ 무엇을(WHAT) : AI 윤리, 데이터 보호, 디지털 시민권을 주제로 청년 주도의 창의적 캠페인, 공모전, 교육용 게임을 출시한다. 소셜미디어, 예술, 게임화(gamification)를 활용해 전 세계 청년이 윤리적 기술 교육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 언제까지(WHEN) : 2032년까지 캠페인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 2035년까지 전 세계적 확대 및 교육체계 통합

○ 성공 판단 기준(HOW) :

- 도달률·참여도(캠페인 조회수, 다운로드 수, 학교 참여율 등)
- 청년층의 디지털 시민권 및 온라인 안전 인식 향상 지표
-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정부·민간 부문 파트너십 구축 사례

3.5 평화와 협력

국제기구 및 정부에게

대사들에게 주는 행동 촉구 : 국가 간 국제관계와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중심에 둔 반기별 평화 대화를 정례화하고,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협력적 틀 안에서 외교적 조화를 촉진한다.

1. 국제이주기구(IOM)에 대한 요청

학생, 연구자, 노동자를 정치적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비자 정책과 포용적 이민 체계 구축을 위해 IOM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외교적 기준을 강화하고 이민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언제(WHEN) : 2027년까지 정책 초안 마련, 2030년까지 시행

○ 어떻게(HOW) : 새 비자 표준 채택률, 보고된 차별 사례 감소, IOM 연례 보고서

2.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인터폴에 대한 요청

사이버보안, 생물보안, 인신·마약 등 각종 불법 거래, 분쟁 예방을 포함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글로벌 안보의 필요성을 UNODC와 인터폴이 인정하고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 언제(WHEN) : 2027년까지

○ 어떻게(HOW) : 구축된 국경 간 협력 메커니즘 수, 인신매매 및 사이버범죄 감소율, UNODC-인터폴 공동 연례 보고서

3.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요청

국적, 종교, 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모든 거버넌스 체계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UNHRC와 OHCHR이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UNDP 또는 UN 경제사회국(UN DESA)이 주관하고 국가·지역별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격년 ‘글로벌 평화와 협력 보고서’를 인권 검토 체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 언제(WHEN) : 2027년까지

○ 어떻게(HOW) : UNHRC 검토에 참여한 국가 수, 보고된 인권침해 발생 빈도

4. 유엔, 아프리카연합, ASEAN, 유럽연합, 각국 외교부에 대한 요청

국가 간·문화 간 공동체 간 존재하는 현존 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모든 국가가 확장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규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한다.

○ 언제(WHEN) : 2027년까지

○ 어떻게(HOW) : 참여 국가 수, 새로운 지역 간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건수, 대화 결과에 대한 독립 평가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에게

1. 분쟁 해결 및 감정 지능을 교육에 통합하기

우리는 각국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분쟁 해결, 감정 발달, 비폭력적 협상 및 중재 기술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2030년까지 최소 40%의 국가가 이러한 모듈을 초등 및 중등 교육 정책 또는 교육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분쟁 해결 교육은 합의 형성, 안전한 학습 환경,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지원한다. 이 개혁은 2050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70% 이상이 평화 지향적 의사소통, 법치주의, 협력적 위기 예방에 대한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별 지표로 측정한다.

2. 지역사회 간 신뢰 강화 및 정보 무결성 확립

우리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외부의 신뢰 구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분열은 종종 역사적 트라우마, 부패, 정치 체계 내부에 만연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공동체는 최소 다섯 개의 지역 대화 모임과 공동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정치적 서사를 팩트체크하고, 공동체 간 긴장을 중재하며, 지역 기반 신뢰·투명성 지표를 담은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040년까지는 정보 무결성을 보장하는 제도·법적 체계가 최대 70%의 국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205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 문화가 제도화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3. 세대·정체성 간 공감과 포용성 증진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청년과 고령 세대 간 차이, 성별, 연령, 성 정체성, 인종, 신념,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포함한 차이를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2030년까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다양성·포용성 지수 (Diversity and Inclusion Index)’를 공동으로 측정해야 하며, 긍정 응답률 6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공감과 포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에게

1. 부패한 교육 체계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우리는 청년이 편향과 낙인을 고착시키는 비포괄적·단면적 교육 체계를 해체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단순한 환경 인지가 아니라 서사 형성, 윤리적 사고, 다층적 이해를 강화하는 교육 체계 구축을 옹호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의 성공은 새롭게 우선순위가 된 교육 프레임워크의 실행력과 청년층의 참여도에 따라 측정된다. 환경 맥락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은 최소 4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재 청년의 97%가 이러한 핵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비교하면 매우 큰 진전이다.

2. 지속적 변화를 위한 세대 간 연결 참여

우리는 청년이 세대 간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여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요청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영향을 보장하는 튼튼한 연결 구조(lattice)의 기반을 형성한다. 2030년까지 청년의 갈등 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 참여율은 현재 1990년 이후 기록된 10~12% 수준에서 30% 증가해야 한다.

3. 의사결정 대표성에서 청년 협력 우선하기

청년 협력 네트워크는 2027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의 위원회, 동아리 운영위원회, 정책 포럼 등에서 최소 10% 청년 대표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전 상황은 매년 모니터링되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다. 주요 성공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다양한 관점이 다부문 대화에서 우선되고 인정받도록 청년 대표성을 극대화하는 것, 청년 의사결정이 단일한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담론을 형성하고 세대 간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민간 부문에게

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협동 개발 의무화

공공부문은 다국적 기업이 사회적 영향, 환경적 책무성, 그리고 협력 기반의 발전을 우선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고 채택하도록 하는 입법·규제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적·이윤 중심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은 표준화된 방법론을 활용한 실험적 프로그램을 도입해, 투입 대비 창출된 사회·환경적 성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NGO·정부기관 간 협력 및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부문 간 지식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2030년까지 구축된 부문 간 파트너십 수(협력 또는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NGO·정부기관과의 공식적이고 활성화된 협업 수)로 측정한다.

2. 인적자본 투자와 책임성 강화

공공부문은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 기업을 성장 시킨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의 역량 강화, 멘토링, 사회적 이동성 향상, 경력 설계 등에 투입된 재정·시간 투자를 포함해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교육·개발 투자액을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조직은 장기적인 인적자본 성장을 위해 세제 혜택, 인증제도, 공공조달 참여 기회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감독 및 확립된 지표, 예를 들어 인적자본 투자수익률(HCROI) 등을 활용해 책임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청년 참여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3. 윤리적 배상(Ethical Reparations)의 이행

공공부문은 규제적·재정적 권한을 활용하여, 방위·무기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이 2030년까지 연간 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윤리적 배상 기금(Ethical Reparations Fund)’을 설립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 기금은 독립적 감사를 의무화하며, 무력 분쟁으로 파괴된 지역사회와 영토의 국제적 재건 및 인도주의 활동에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방위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평화 중심의 경제 거버넌스를 촉진하며, 공공부문은 국제 금융기관(예: ESG 등급기관, 의무 공시제도)과 투자자 연합을 활용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3.6 집단행동과 연대

이 마지막 행동 요청은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긴급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집단행동과 연대라는 주제는 모든 형태의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집단행동은 우리가 다음을 실천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 진실을 말하는 힘을 강화할 때
- 권력을 재배분할 때
- 책임을 위한 법적 틀을 발전시킬 때

연대의 실천은 모든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통해 우리의 행동 요청을 탐색하도록 이끈다.

1. 대중에게 더 큰 권력 분배를 실현하기

진정한 변화는 대중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진정성을 바탕으로 리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계할 수 있다.

2.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권력을 협동조합과 같은 사람 중심의 경제 모델로 재배분할 때, 경제적 전환은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3. 기후 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변화의 수단으로 가속화하기

환경 지속가능성은 사회적·분배적 정의의 과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해결책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야 하며, 기후 행동에서 모든 부문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4. 기술을 통한 윤리적 혁신과 참여의 지속가능한 경로 실현하기

디지털화에는 국경이 없고 혁신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윤리적이고 공정한 참여 경로를 포함하는 해결책은 기술을 매개로 시민사회와 더욱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5. 책임성과 정의를 위한 강화된 메커니즘 구축하기

역사적 책임과 전환적 정의는 평화와 협력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할 때,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정보가 커지는 시대에 우리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생산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게

1. 대중에게 더 큰 권력 분배를 실현하기

- 정부와 국제기구는 개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아동과 청년에게 일반 교육뿐 아니라 환경 관리, 가족학, 가족 심리학과 같은 분야의 교육도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나아가 정부는 자국민과 국제 학생 모두에게 국적이나 인종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의 질 높은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 각국 정부(외교부와 교육부를 포함)와 국제기구는 국제 학생 교류를 문화·지식 교류의 경로로서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모든 국가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대표성이 낮은 공동체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참여(tokenism)를 넘어 포용적 참여와 공동 창조(co-creation)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경로를 구축하고 지원할 책임을 가진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장기적이고 조정된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자원과 제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유 비전(shared vision)을 구축해야 하며, 시민 의견을 가시적인 행동과 피드백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공유 비전 속에서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모든 접근 가능한 플랫폼과 수단을 통해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 국제기구 역시 회의에서 CSO(시민사회단체)를 정식 참여자 또는 옵서버로 포함하거나,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거나, 시민의회와 같은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구조화된 참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 국제기구는 효과적인 참여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구-정부-대중 사이에 신뢰와 공동책임(shared ownership)을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는 대표성이 낮은 집단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이해관계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배경이 실제로 대표되는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진실을 말하는 메커니즘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풀뿌리 활동가를 포함한 시민사회 조직, 언론인과 같은 개인이 그들의 정직성과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 정부와 국제기구는 사람·연대·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경제·사회 질서를 구축할 공동 책임을 가진다.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은 번영과 형평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적 성공을 인간과 환경의 안녕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협동조합 모델을 국가 발전전략·환경 지속가능성 전략·사회정의 전략에 통합하도록 권고된다. 여기에는 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연대, 참여,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포함된다.
-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제기구는 협동조합 모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인프라 확충, 혁신·스타트업 전용 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청년·여성·농촌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정부는 조약과 동맹을 통한 지역 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에 참여하여, 전 세계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 간 이동성, 지식교류, 공정무역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변화의 수단으로서 기후 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 실현하기

-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후정책의 중심에 정의를 두어야 한다. 사람과 자연자원의 착취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두 기관은 자신들의 기후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부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살 수 있는 미래와 건강한 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파괴적 기후 붕괴에 직면해 있다. 생명, 생계, 문화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으며, 기후 난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것을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다뤄야 한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 대해 강력한 책임 구조가 시급하다. 기업은 대부분의 배출과 환경 피해를 야기한 만큼, 그 피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파괴 행위를 멈춰야 한다.
- 우리는 UN과 국제에너지기구가 밝힌 과학적 합의를 지지한다.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은 살 수 있는 미래와 양립할 수 없다. 전환은 기후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고려한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
- 우리는 모든 것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를 끝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후 재난과 환경적 불의가 계속될 때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전환해야 한다.
- 현재의 기후·자연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정부와 교육기관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기, 자연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개혁될 것을 촉구한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녹색·청색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과학에 기반해 기후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미디어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와 관련한 진실 말하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기업 및 생태 파괴적 행위를 조장하는 기업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는 UN이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기후재원(Climate Finance) 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분야에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COP27에서 마련된 기존의 틀을 기반으로, 각 국가는 해당 기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단체와 청년 주도 운동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Youth Climate Justice Study(ClimataWorks Foundation, 2022)에 따르면, 2019~2021년 전 세계 기후 완화 관련 민간 기부금 가운데 청년 주도 기후정의 활동이 받은 비중은 단 0.76퍼센트에 불과했다. 국제기구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주도 기후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우선적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
- 기후 체계 전반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COP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로비 세력과 같은 불성실한 행위자가 실질적 조치를 거부하거나 저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자연을 복원하고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생태계를 위한 야심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 훼손을 되돌리기 위한 필수 조치다. 예를 들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이행, 자연 복원에 투자할 자원 확보, 불법 야생동물 거래 대응, 생태·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필수 생명 유지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4. 기술을 통한 혁신의 윤리적 실천과 지속가능한 참여 경로 실현하기

- 정부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해 공통의 윤리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은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촉진하며, 기술이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샌드박스 규제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연구자,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시험하고 서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술적 해결책이 다양한 지역 인프라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술이 국경을 초월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시민과 협력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촉진해야 한다. 이것은 더 안전하고, 더 윤리적이며, 더 인간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는 개인의 데이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 도입,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도구 구축 등이 포함된다.
- 정부와 국제기구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디지털 안전 연합(Global Coalition for Digital Safety)과 같은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에 참여하여, 온라인 위해와 허위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혁신이 진전보다 더 큰 해를 초래하는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정부와 국제기구는 UN 디지털 협력 로드맵과 같은 국제·국가 정책을 집행하여 인권, 투명성, 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향평가 실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률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설정이 필요하다.

5. 권력 구조 내에서 책임성과 정의를 강화하는 메커니즘 실현하기

- 정부는 정의롭고 유연하며 적응적인 차세대 법적 책임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성 체계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공정성,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 이 행동 요청에는 사법 제도와 형사 사법 체계를 지역 상황에 맞게 개혁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민사, 행정, 노동 등 모든 유형의 범죄가 현재의 사회적 관계 상태에 비례하여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 책임성은 역사적 맥락과 지배적 서사의 불공정한 형성에 관련된 두 가지 영역에서의 책임도 포함한다.
- 주변화된 집단, 억압받아 온 사회와 개인을 다루는 역사적 지배 담론의 관점에서 공적 서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억압받은 서사가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진실을 보장하는 균형추로서 공적 공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지역적 맥락에 따라, 그동안 법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불평등·침해·억압을 경험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 국제체계에는 국제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구조가 존재하지만, 현재 이 메커니즘은 효과적이지 않다. 전 세계 시민사회는 인권침해, 환경 파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수차례 행동해 왔다. 국제적 침략과 억압에 대한 실질적 정의 실현은 피해자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갈등으로 분열된 시민사회의 신뢰와 결속을 강화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옹호 활동이 실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책임과 연대를 만들어낸다.
- 공식적 정부 간 국제기구는 비공식적·비정부적·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등에게도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종종 간과되지만, 그들이 가진 전문성, 현장 경험, 문제에 대한 직접적 태도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 관행은 바뀌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추가적 가치가 국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에게

1. 대중에게 더 큰 권력 분배 실현하기

- 민간 부문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거래하는 대중에게 책임을 지며, 사회 이동성, 복지, 구매력을 보장하는 건강한 권력 구조를 촉진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이자,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 민간 부문은 기업 내부에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하며, 주변화되거나 대표성이 낮은 집단을 채용·교육·리더십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민간 부문은 목적성을 가진 투자를 해야 하며, 예산의 일부를 여성, 청년, 소수집단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 프로젝트나 벤처에 배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은 다양성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형평성, 혁신, 사회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 민간 부문은 협동조합 모델의 확장, 혁신과 투자 활성화, 공급망 전반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민간기업, 투자자, 기업 단체에 다음을 요청한다 :
- 민간 부문은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생태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뉴델리 행동의제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협동조합에 투자하고 협력하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촉진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 민간 부문은 협동조합 성장을 위해 공동 투자해야 하며,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산업과 지역에서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기술·재정·역량 강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민간 부문은 부문 간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 배제와 같은 주요 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구조를 의미한다.

3. 변화의 수단으로서 기후 회복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실현하기

- 경제 생산과 자원 개발의 주요 주체로서 민간 부문은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 민간 부문은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원 사용과 개발 과정에서 장기적인 자원·생태계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민간 부문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해야 한다.
- 자연과 전 지구적 생태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단기 이익보다 생물다양성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부합하는 장기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4. 기술을 통한 혁신의 윤리적 실천과 지속가능한 참여 경로 실현하기

- 혁신의 선도자이자 발전의 추진자인 민간 부문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 민간 부문은 포춘 500 기업들의 채택을 통해 정당성을 갖춘 표준화된 윤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민간 부문은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자립 가능한 인프라에 투자하여, 공동의 혁신과 장기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5. 권력 구조 내에서 책임성과 정의를 강화하는 메커니즘 실현하기

- 민간 부문은 고유한 영향력을 갖는 만큼, 책임성·책임·정의의 메커니즘이 기업 내부 구조와 영향권 내에 존재하도록 할 고유의 책임을 가진다. 이 책임성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이윤과 의사결정 체계 전반에서 균형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민간 기업, 투자자, 기업 단체에 다음을 요청한다.
 - 기업 지배구조 전반 이사회, 경영진, 공급망에 투명한 고충처리 및 책임성 메커니즘을 내재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이 윤리적 검증 없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 감독기구나 옴부즈맨을 설치하여 기업의 위법행위, 착취, 환경 피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복구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직원, 이해관계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기업 정책과 관행 형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정의는 권한 부여에서 시작된다. 즉, 권력의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의 방향 설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 운영 또는 공급망과 연계된 사회·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회복(restitution)과 지역사회 복구를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신뢰와 지역 기반 시설의 회복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불평등·이주·환경 훼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을 우선해야 한다.
 - 재무성과와 환경성과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발자국—노동, 형평성, 사회 이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정기적인 권력 감사(power audit)를 개발하고 공개해야 한다. 책임성은 이윤만큼 측정 가능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에게

1. 대중에게 더 큰 권력 분배 실현하기

- 전 세계의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는 서로가 가진 힘, 옹호, 저항, 연대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인 협력과 가능한 모든 계기에서의 결집은 필수적이다. 사회계약의 기반 속에서 권력을 위임하는 주체는 정책결정자, 공무원, 선출직이 아니라 결국 일반 시민이다. 사람들, 공동체, 시민단체는 권력 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지역과 세계 환경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는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한다.
-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는 아동·청년의 공식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 관리, 가족학, 가족 심리학 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시민사회와 공동체는 국적·인종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자국민 및 국제 학생 포함)이 양질의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 국제 학생 교류를 촉진하고, 각국 청년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 시민사회는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민주적 참여,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 공동 번영·사회 정의를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해결책을 만드는 변혁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에서 이러한 모델을 실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

화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3. 변화의 수단으로서 기후 회복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실현하기

- 우리는 시민사회가 정부가 UNFCCC 체계 내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책임을 묻고, 진정한 기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IPCC 권고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시민사회가 지구와 지역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 지역 기후 정화 활동을 조직하고, 토착 식물을 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의 실천을 포함한다.

4. 기술을 통한 혁신의 윤리적 실천과 지속가능한 참여 경로 실현하기

-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혁신 전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는 기술 개발의 설계·투자·배치·규제 단계에서 초기부터 윤리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 산업계, 학계, 사용자와 함께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는 포용성, 데이터 주권, 인간 존엄성, 공동 번영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기술 혁신에 내재화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폭넓은 참여는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 증거 기반 평가를 통해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혁신과 정책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며 책임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5. 권력 구조 내에서 책임성과 정의를 강화하는 메커니즘 실현하기

- 시민사회는 실제 책임성의 살아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하며, 정의가 단지 법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 여기서 책임성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회복, 기억, 정의를 공동의 시민적 의무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조직, 옹호 네트워크, 언론, 교육기관과 같은 시민사회 행위자들은 제도적 관성을 도전하고, 사회적·도덕적 정의의 차원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공적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 이러한 행동 요청에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풀뿌리 감시 시스템과 시민 감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시민사회는 지역의 가치와 현실을 반영하는 지역 사회 주도 정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해야 하며, 책임성이 과거의 권력 구조가 아닌 현재의 사회 윤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시민 영역에서의 책임성은 또한 역사적 침묵에 맞서는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된 목소리를 복원하고, 과거의 불의와 현재의 불평등 사이의 연속성을 드러내며, 아래로부터 역사를 서술할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공공 교육, 예술적 표현, 공동 기억을 통해 진실 말하기가 단순한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입법을 넘어서는 회복적 실천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피해가 정상화되거나 무시되어 온 공동체를 위해 자원, 파트너십, 연대 캠페인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책임성은 시민적 책임의 문화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의의 모든 실천이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내 신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에게

1. 대중에게 더 큰 권력 분배 실현하기

- 청년은 평생학습의 관점을 갖고, 다양한 교육 기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 청년은 정부가 청년을 자원·책임·권한을 갖춘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의사결정 영향력과 행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청년은 청년위원회, 공공 대화, 거버넌스 과정 등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 청년은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기성세대의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 디지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 안에서 지속성과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말해, 청년은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며,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넓혀야 한다.

2.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 우리는 청년이 일상 속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고, 기존의 사람 중심 모델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청년은 연대, 상호부조,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 청년은 자신의 선택이 협동조합적 실천의 표준을 형성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서 구매하고,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 청년은 협동조합주의를 포용하여, 포용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경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
- 청년은 목적 있는 혁신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 배제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창출하는 것이다.
- 청년은 국경을 넘어 연결됨으로써, 국제 청년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변화를 옹호하며 집단적 목소리를 확대해야 한다.

3. 변화의 수단으로서 기후 회복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실현하기

- 청년은 지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역 기후 정화 활동을 조직하고, 토착 식물을 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 청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예술, 정책 옹호 등을 활용해 지도자들에게 녹색 혁신과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
 - 청년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정의, 형평성, 기술을 연결하는 청년 주도 기후 연합에 참여하거나 직접 조직해야 한다.
- 우리는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가 기후행동, 사회정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캠페인, 교육, 인식 제고를 주도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가 동료들을 조직하여, 지역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와 옹호 활동을 이끌고 형성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청년 네트워크 간 협력을 촉구하며, 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글로벌 협력과 효과성을 강화해야 한다.
 - 우리는 공동 캠페인을 위한 플랫폼, 공동 개최 행사, 옹호 활동을 마련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와 정책 결정에 대한 가시성과 영향력을 높일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청년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지원적 동료 공동체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동기부여, 멘토십,

네트워크는 SDGs 달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과 지속적 참여의 핵심 요소다.

4. 기술을 통한 참여의 지속가능한 경로와 혁신의 윤리적 실천 달성하기

-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계에서 안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청년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이중 인증 사용,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존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실천을 이행해야 한다.
- 청년은 디지털 건강 문해력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웰빙을 지지하고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
- 또한 청년은 디지털 혁신의 공동 창작자이자 리더로 나서야 한다.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모든 공동체에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디지털 건강 도구 및 정책의 설계, 거버넌스, 옹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청년은 혁신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또래와 연결되고, 멘토십과 재정적 지원을 얻으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기술 기반 해결책을 통해 시스템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5. 권력 구조 안에서 책임성과 정의를 강화하는 체계 달성하기

- 오늘의 청년은 특권뿐 아니라 역사적 불평등의 결과도 물려받는다. 청년의 역할은 책임성을 자기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다. 책임을 미래로 향한 실천으로 바꾸어 존엄과 공정과 신뢰를 사회 안에 다시 세워야 한다.
- 이 행동 촉구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청년은 불평등과 폭력과 배제의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 또 지역과 세계에 남아 있는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 청년은 시민 감수성과 도덕적 용기를 기르고 부당한 구조를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 추궁이 분열을 유지하거나 체면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공동선을 실현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 청년에게 책임성은 기억을 주도하는 일도 포함한다. 청년은 역사의 서사를 비판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지워진 진실을 드러내고 세습된 편견을 직시하고 왜곡된 진실을 거부해야 한다. 창작 활동과 공적 대화와 디지털 행동을 통해 기억이 분노를 재생산하는 수단이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청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회복적 정의를 직접 실천하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상처 받은 사람과 책임을 진 사람이 적이 아니라 공동의 도덕적 과업의 참여자로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공감과 화해와 회복의 장을 열어야 한다. 청년의 책임성은 인간성에서 가장 급진적이어야 한다. 정의 요구는 치유와 강화와 재건의 과정이어야 하고 더 공정한 미래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집단적 미래를 위한 전 세계적 전환은 우리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우리가 전 지역과 전 문화와 전 분야를 넘나들며 변화를 위해 연결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서서 다음을 위해 연결되기를 요청한다.

People, Planet, Purpose.
 Mense, Planeet, Doel
 Njerëzit, Planeti, Qëllimi
 人、地球、目的
 Մարդիկ, Մոլորակ,
 Նպատակ
 İnsanlar, Planet, Məqsəd
 Pertsonak, Planeta, Helburua
 Людзі, Планета, Мэта
 मानुष, ग्रह, उद्देश्य
 Ljudi, Planeta, Svrha
 Хора, Планета, Цел
 လူတွေ၊ ကမ္ဘာ၊ ရည်ရွယ်ချက်
 Persones, Planeta, Propòsit
 Mga Tao, Planeta, Katuyoan
 Anthu, Dziko, Cholinga
 人类, 地球, 使命
 Populu, Pianeta, Scopu
 Ljudi, Planet, Svrha
 Lidé, Planeta, Účel
 Mennesker, Planet, Formål
 Mensen, Planeet, Doel
 മനുഷ്യ, ഗ്രഹ, ഉദ്ദേശ്യ
 Homoј, Planedo, Celo
 Inimesed, Planeet, Eesmärk
 Tao, Planeta, Layunin
 Ihmiset, Planeetta, Tarkoitus
 Peuple, Planète, Objectif
 Minsken, Planeet, Doel
 Xente, Planeta, Propósito
 ხალხი, პლანეტა, მიზანი
 Menschen, Planet, Zweck
 Άνθρωποι, Πλανήτης,
 Σκοπός

ሰባ, ግፍ, ዕድ
 Moun, Planèt, Objektif
 Mutane, Duniya, Manufa
 Kānaka, Honua, Kumu
 אנשים, כוכב לכת, מטרה
 लोग, ग्रह, उद्देश्य
 Tib Neeg, Lub Ntiaj Teb, Lub
 Hom Phiaj
 Emberek, Bolygó, Cél
 Fólk, Reikistjarna, Tilgangur
 Ndị mmadụ, Uwa,
 Ebumnuche
 Manusia, Planet, Tujuan
 Daoine, Pláinéad, Cuspóir
 Persone, Pianeta, Scopo
 人々、地球、目的
 Wong, Planèt, Tujuan
 ಜನರು, ಗ್ರಹ, ಉದ್ದೇಶ
 Адамдар, Планета, Мақсат
 ජනපද, ග්‍රහය, කොප්පය
 Abantu, Isi, Intego
 사람, 지구, 목적
 Gel, Planêt, Armanc
 Эл, Планета, Максат
 ཇིལ, ལྷན, ཉུལ་མཁོག
 Populus, Planeta,
 Propositum
 Cilvēki, Planēta, Mērķis
 Žmonės, Planeta, Tikslas
 Leit, Planéit, Zweck
 Луѓе, Планета, Цел
 Olona, Tany, Tanjona
 Manusia, Planet, Tujuan
 ആളുകൾ, ഗ്രഹം, ലക്ഷ്യം

Nies, Pjaneta, Ghan
 Tangata, Ao, Kaupapa
 लोक, ग्रह, उद्देश
 Хүмүүс, Гагар, Зорилго
 मानिसहरू, ग्रह, उद्देश्य
 Mennesker, Planet, Formål
 ଲୋକ, ପୃଥିବୀ, ଉଦ୍ଦେଶ୍ୟ
 خلک، سیارہ، موخہ
 مردم، سیارہ، هدف
 Ludzie, Planeta, Cel
 Pessoas, Planeta, Propósito
 ਲੋਕ, ਗ੍ਰਹਿ, ਮਕਸਦ
 Runakuna, Planeta, Ruray
 Oamenii, Planetă, Scop
 Люди, Планета, Цель
 Tagata, Paneta, Fa'amoemoe
 ജനാഃ, ഗ്രഹഃ, പ്രയോജനം
 Daoine, Planaid, Adhbhar
 Људи, Планета, Сврха
 Batho, Lefatše, Morero
 Vanhu, Pasi, Chinangwa
 ماڻهو، نرتي، مقصد
 சமையலி, குறைய, தரமுறை
 Ludia, Planéta, Účel
 Ljudje, Planet, Namen
 Dadka, Dunida, Ujeeddo
 Personas, Planeta, Propósito
 Jalma, Planét, Tujuan
 Watu, Sayari, Kusudi
 Människor, Planet, Syfte
 Одамон, Сайёра, Ҳадаф
 மக்கள், கோள், நோக்கம்
 ప్రజలు, గ్రహం, ఉద్దేశ్యం
 မှုန, လော, ယိာ်မာယ
 İnsanlar, Gezegen, Amaç